

희망근로프로젝트의 투입모형 및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

연 구 진

연구책임

박승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진

김현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배귀희(송실대학교 교수)

목 차

I. 서론	1
1. 과제의 배경 및 목적	1
2. 과제 범위 및 방법	2
3. 과제의 주요내용	3
II.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개요	4
1. 사업배경	4
2.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4
3. 사업내용	5
4. 사업예산	7
5. 참여대상	10
III. 희망근로프로젝트 국내외 사례	14
1.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국내사례	14
1) 공공근로사업	14
2) 희망근로사업 우수사례	26
2.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국외사례	38
1)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특징	38
2) 구체적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례	41
3. 시사점	49
1) 국내 사례 시사점	49
2) 국외 사례 시사점	51

IV. 희망근로프로젝트 적정 인원 규모산정	55
1.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적정 인원 규모	55
1) 기존 인원 규모	55
2) 지역경제 지표 현황	56
2.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적정 인원수의 영향 변수	79
1) 지역경제 특성을 고려한 기본 모형 설정	79
2) 변수간 인과관계를 적용한 추계	82
3.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적정 인원 산정	85
1) 적정 인원 산정 결과	85
2) 2009년 희망근로 인원수 산정 근거	87
3) 2010년 희망근로 적정 인원수 예측	88
V.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성과	89
1. 목표대비 경제적 성과	89
2. 단기적 경제적 성과	91
3. 장기적 경제적 성과	95
4.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개선방안	101

표 목 차

<표-1> 희망근로사업의 내용	6
<표-2> 시도별 사업규모	9
<표-3> 지역별 국고지원 기준	0
<표-4> 희망근로 사업추진 현황	2
<표-5>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의 비교	4
<표-6> 공공근로사업의 기간별 특징	5
<표-7> 공공근로사업의 내용	6
<표-8>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연도별 현황(단위: 명, %)	7
<표-9>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연령별 현황(단위 : 명, %)	8
<표-10> 공공근로사업참여자의 학력별 현황(단위: 명, %)	8
<표-11>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직업별 현황(단위 : 명, %)	9
<표-12> 공공근로사업의 연도별 예산액 및 집행액(단위: 억원, %)	0
<표-13> 공공근로사업의 예산항목별 현황(단위: 억원, %)	2
<표-14>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유형별 현황(단위: 억원, %)	2
<표-15> 주요국의 노동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	3
<표-16> 주요국의 2008년~2010년까지 경기 부양책 구성	40
<표-17> 시도 인구 추이(1960년~2005년)	59
<표-18> 시도 인구 총유입	6
<표-19> 시도 인구 총유출	6
<표-20> 시도 산업별 특화 분석	66
<표-21> 권역별 산업 특화 분석	6
<표-22> 시도 산업별 경쟁력 분석	70
<표-23> 시도별 산업 생산액	2
<표-24>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74
<표-25> 시도별 재정자립도	75
<표-26> 시도별 지방세	78
<표-27> 상관관계 결과	80

<표-28> 단위근 검정 결과	80
<표-29> 분석결과	81
<표-30> 기초통계분석	82
<표-31> 변수간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결과	84
<표-32> 단위근 검정 결과	85
<표-33> 벡터자기회귀모형 결과	86
<표-34> 2010년 지역별 희망근로수 예측 및 배분	87
<표-35> 시기별 실업자 및 실업률	91
<표-36> 시도별 상품권 공급 현황	94
<표-37> 사업별 희망근로 사업의 사업장, 투입 인원, 투입 예산	96
<표-38> 희망근로 4대 랜드마크 사업개요	99
<표-39> 희망근로 시도 대표사업개요	100

그림목차

<그림-1> 광역자치단체별 총사업비	8
<그림-2> 희망근로 시도별 인원 및 예산비율	3
<그림-3>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체계	2
<그림-4> 경제활동인구(천명)	6
<그림-5> 비경제활동인구(천명)	6
<그림-6> 실업자(천명)	5
<그림-7> 실업률(%)	5
<그림-8> 교육정도별 비자발적 실업률(%)	5
<그림-9> 취업자(천명)	8
<그림-10> 고용률(%)	5
<그림-11> 시도 인구 추이(1960년~2005년)	6
<그림-12> 시도별 총인구 유입	6
<그림-13> 시도별 총인구 유출	6
<그림-14> 권역별 산업 특화(수도권/비수도권)	6
<그림-15> 권역별 산업 특화(광역시/일반도)	6
<그림-16> 시도별 산업 생산액 추이	3
<그림-17>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추이	5
<그림-18> 시도별 재정자립도 추이	7
<그림-19> 시도별 지방세 추이	9
<그림-20> 지역별/변수별 추이	82
<그림-21> 참여인원 결정요인 변화 추이	8
<그림-22> 희망근로 사업의 개요 및 목표 요약	9
<그림-23> 희망근로 해당 사업별 사업장 개수 비율	9
<그림-24> 희망근로 해당 사업별 투입 인원수 비율	9
<그림-25> 희망근로 해당 사업별 투입 예산 비율	9

I. 서론

1. 과제의 배경 및 목적

□ 과제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실물경제 침체 등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실업자 및 자영업자의 휴·폐업 증가
 -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08년까지는 3%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09.2월 현재 3.9%까지 상승
 - 특히, 청년실업률은 전년의 7%대에서 금년 들어 8%를 훨씬 상회하면서 공식 실업률보다 높은 상승폭 시현
 -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 및 휴·폐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현 경제여건의 장기적인 지속성을 감안한 긴급한 대책 마련 필요
 - 정부가 한시적으로 경제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지원
 - 임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내수 소비 진작 및 영세 상인들의 소득증대 도모
-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규모의 산정, 정책성과 등의 분석을 통한 사업의 개선 등이 필요

□ 과제의 목적

-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국내외 유사사업 사례 및 시사점 검토를 통한 사업 보완 및 발전적 개편방안 제시
- 기 산출된 희망근로프로젝트 적정 인원수 산출 및 주요변수 선정의 과학적 근거 제시
- 2010년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적정 인원(안) 산출
- 희망근로프로젝트로 인한 경제적 효과 제시

2. 과제 범위 및 방법

□ 과제의 범위

- 공간적인 범위
 - 16개 시도
- 시간적인 범위
 - 2009년

□ 과제의 방법

- 희망근로 프로젝트 관련 이론연구
- 국내외 사례연구 및 정책적 시사점
- 적정인원수 산정 및 산정의 근거 제시
- 시책의 성과분석

3. 과제의 주요내용

-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이론적 기초
 - 유사사업의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사업성격 및 유형
-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사례분석
 - 국내사례
 - 국외사례
 - 정책적 시사점
- 투입가능 적정인원수 산출
 - 적정인원수 변동의 주요변수 추출
-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 추정
 - 희망근로프로젝트의 특징 및 경제적 성과
 -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사회적 자본 확충간 관계 도출

Ⅱ.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개요

1. 사업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래한 국내 경기침체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경기침체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 제기
- 이를 위해 수정예산안 제출을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2009. 3)
- 추경안에 포함된 실업급여 및 일자리 예산 증액분은 실업급여 등 확대 2.2조원, 일자리 유지 및 나누기 5,100억원, 일자리 만들기 2.8조원, 교육·훈련 1,600억원으로 총 5조 6,600억원의 규모

※ 여기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국비와 지방비 총 2.6조원이 편성됨(국회에 산정책처, 2009)

2.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사업목적

- 경제위기하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지원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해소
- 지역상권 회복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방향

- 취약계층 생계지원
- 경제위기하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근로와 연계하여 한시적으로 생계지원

- 일자리 창출

-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대상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근로의욕 고취

- 지역경제 활성화

-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의 매출을 증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사업내용

- 전국 공통적 사업과 지자체별 특성화 사업으로 구분

- 4대 랜드마크 사업, 전국 공통생산 사업(16개), 시도대표사업(16개), 시군구 특화사업(1개), 일반사업(8개분야 126개 사업)으로 구분

<표-1> 희망근로사업의 내용

구분	특징
4대 랜드마크사업(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 보존사업 - 주거환경 취약지역“동네마당”조성사업 -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 산업단지 및 영세기업 밀집지역 환경정비
전국공통생산적 사업 (1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주변 안전시설 개보수 - 행정처분 등 자료 입력사업 - 지자체 물품 전자데그 부착사업 - 민관협의체 코디네이트 배치 - 인강대장 일제정비 추진 - 인터넷 지방세 납부사업 -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 공중화장실 개선 DB 구축사업 -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사업 - 시도, 시군구별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 - 재해취약시설 일제정비 - 물놀이 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 - 전통시장 청결사업, 택배 및 주차 도우미 - 지방 문화재 보수 및 안전관리 지원 - 공공체육시설 관리, 점검 지원 - 저소득층 집수리 연계 일자리 창출사업
시도 대표사업 (1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 Trekking Circle(서울) - Green Way 조성(부산) - 마라톤 코스주변 건물옥상 정비사업(대구) -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인천) - 저소득층 자녀 외국어 교실 운영(광주) - Green Way 조성(대전) - 태화강 생태공원 및 초화단지 조성(울산) - 희망일터 정비사업(경기) - 등산로 가꾸기 사업(강원) - 무심천 생태복원 및 자전거 도로 공원화 사업(충북) - 지하수 폐지하 관정 복구(충남) - 아름답고 건강한 생태하천 정비(전북) - 옥외, 공공 광고물 일제정비(경북) - 꽃길 가꾸기 사업(경남) - 대학생 전공 Career 개발사업(제주)
시군구 특화사업(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시군구 특화사업
일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분야, 126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지원사업 ▫ 주민생활환경정비사업 ▫ 정보화 및 자료조사 ▫ 환경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예방사업 ▫ 서비스 지원사업 ▫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 지역공공개선 시설사업

4. 사업예산

- 총 사업비

- 17,070억원 (국비 13,280억원, 지방비 3,790억원)
- 국비, 지방비 비율은 서울시(53:47), 기타 15개 시·도 평균 (85:15) 수준
- 국고보조금 차등 적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거 지자체 재정자주도·사회보장지수를 반영하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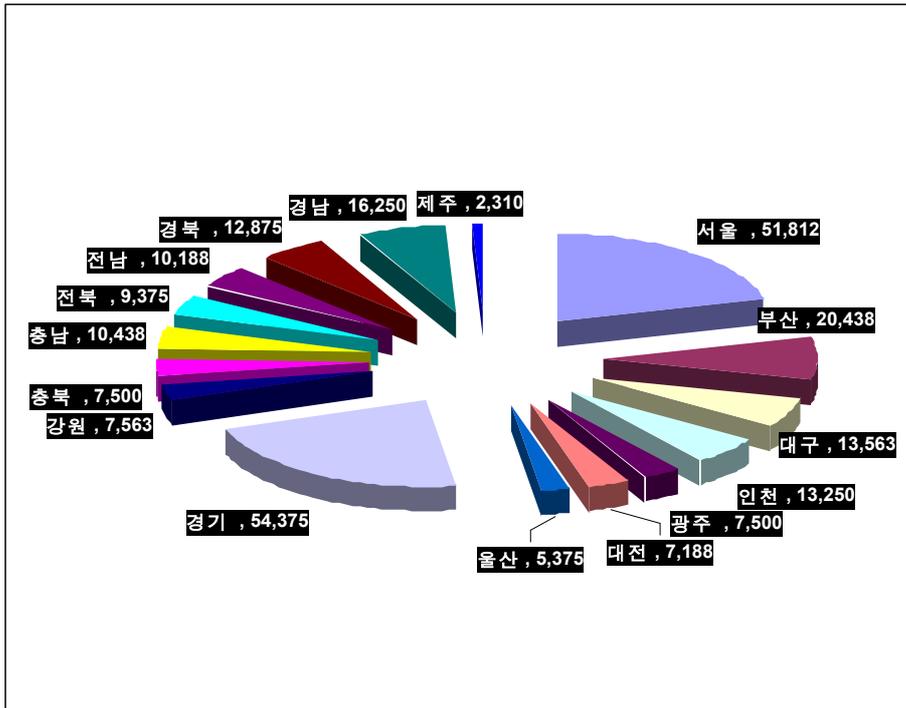
- 인건비 및 재료비

- 참여자 일인당 일 인건비 : 33,000원
- 참여자 일인당 월 인건비 : 약 830,000원
- 총인건비 : 830,000원(월)×6개월×25만명 = 12,450억원 (총사업비의 75%)
- 재료비 : 총 4,620억원 (총사업비의 25%)

- 시·도별 사업규모

- 총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77.80%, 광역자치단체는 11.19%, 기초는 11.01%를 지원
- 광역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서울, 부산의 순을 보이고 있음
- 광역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서울, 부산의 순을 보이고 있음

<그림-1> 광역자치단체별 총사업비



<표-2> 시도별 사업규모

구분	목표 (명)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광역시 (백만원)	기초 (백만원)	국비 비율	광역시 비율	기초 비율
계	250,000	1,707,000	1,328,000	379,000	190,964	188,036	77.80%	11.19%	11.01%
서울	51,812	353,670	186,188	167,482	89,697	77,785	52.64%	25.37%	21.99%
부산	20,438	139,506	125,155	14,351	9,800	4,551	89.71%	7.03%	3.26%
대구	13,563	92,578	82,829	9,749	6,522	3,227	89.47%	7.04%	3.49%
인천	13,250	90,445	80,956	9,489	6,369	3,120	89.51%	7.04%	3.45%
광주	7,500	51,195	46,075	5,120	3,584	1,536	90.00%	7.00%	3.00%
대전	7,188	49,062	43,493	5,569	3,491	2,078	88.65%	7.11%	4.24%
울산	5,375	36,690	31,223	5,467	2,721	2,746	85.10%	7.42%	7.48%
경기	54,375	371,164	301,551	69,613	28,839	40,774	81.24%	7.77%	10.99%
강원	7,563	51,622	42,511	9,111	3,949	5,162	82.35%	7.65%	10.00%
충북	7,500	51,195	42,160	9,035	3,915	5,120	82.35%	7.65%	10.00%
충남	10,438	71,246	58,672	12,574	5,449	7,125	82.35%	7.65%	10.00%
전북	9,375	63,994	52,700	11,294	4,895	6,399	82.35%	7.65%	10.00%
전남	10,188	69,540	57,267	12,273	5,319	6,954	82.35%	7.65%	10.00%
경북	12,875	87,885	72,374	15,511	6,722	8,789	82.35%	7.65%	10.00%
경남	16,250	110,923	91,346	19,577	8,485	11,092	82.35%	7.65%	10.00%
제주	2,310	15,785	13,000	2,785	1,207	1,578	82.35%	7.65%	10.00%
본부		500	500						

○ 자자체별 국고지원 기준

- 기초생활급여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며, 서울 등 재정형편이 양호한 지역의 국고 보조금 지원이 낮음
- 반면, 실업율이 높은 광역시의 자치구의 경우, 국고 보조율이 상당히 높음

<표-3> 지역별 국고지원 기준

구 분	국비 비율	기초 지자체 현황
특별시 자치구 (25개)	60%	노원구 강서구 강북구 중랑구 은평구 관악구 성북구 도봉구 등 8개 자치구
	50%	동작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양천구 송파구 종로구 구로구 성동구 영등포구 금천구 강동구 등 14개 자치구
	40%	중구 서초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44개)	90%	부산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영도구 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강서구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중구 인천 남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동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서구 중구 대덕구 울산 중구 북구 등 39개 자치구
	80%	부산 중구 인천 중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동구 등 5개 자치구
경기도 불교부 단체 (8개)	80%	안양시 안산시 화성시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등 6개 시
	70%	성남시 과천시 등 2개 시
기타 시·군 (153개)	80%	153개 시·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울진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함)

5. 참여대상

-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음

※ 배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권자
-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자(중복배제) 등

- 주민등록상 1가구 1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선발절차

- 신청자를 사업별로 분류
-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적격 판단
- 신청자 초과시 선발기준에 의거

- 추진현황

- 목표인원 25만에 비해 09년 8월 20일 현재, 목표인원의 103.7%인 25만 9천여명이 희망근로에 참여
- 목표인구 대비 전북(127.5%), 제주(125.8%)의 희망근로 현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전국에 걸쳐 사업장의 개수는 29,000여개이며, 서울이 9천여개, 경기도가 5,600여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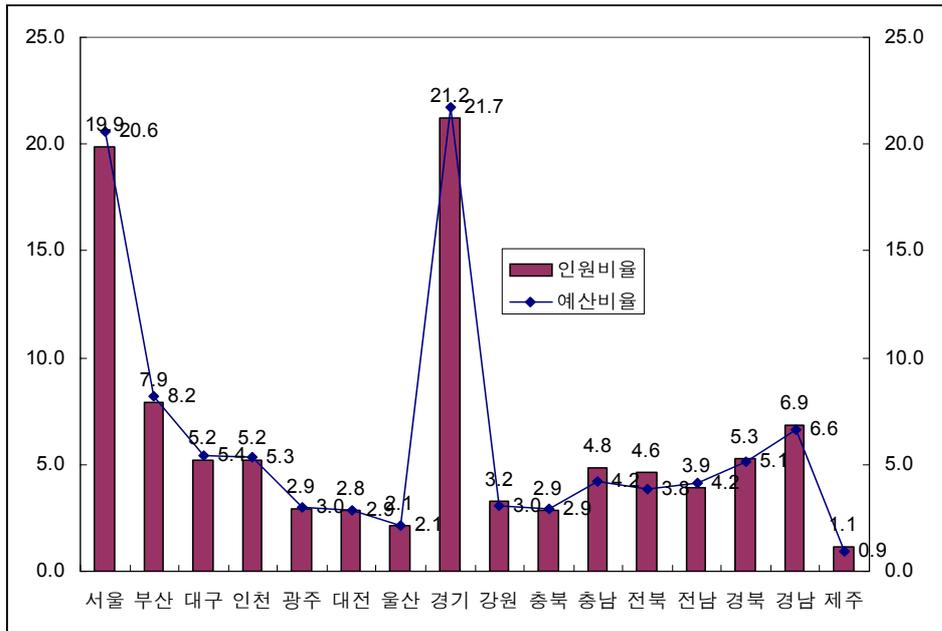
<표-4> 희망근로 사업추진 현황

시도	목표 인원 (A)	신 청 자		총 선 발		현인원(참여)		사업 예산 (백만원)	사업장 갯수
		인원 (B)	비율 (B/A)	인원 (C)	비율 (C/A)	인원 (D)	목표대비 비율(D/A)		
총계	250,000	388,042	155.2%	311,774	124.7%	259,169	103.7%	1,703,238	29,000
서울	51,812	60,067	115.9%	58,053	112.0%	51,586	99.6%	350,149	9,023
부산	20,438	32,526	159.1%	24,296	118.9%	20,445	100.0%	139,420	802
대구	13,563	24,068	177.5%	15,838	116.8%	13,526	99.7%	92,578	1,123
인천	13,250	22,528	170.0%	17,589	132.7%	13,409	101.2%	90,389	1,046
광주	7,500	12,143	161.9%	9,461	126.1%	7,500	100.0%	51,195	604
대전	7,188	11,249	156.5%	9,352	130.1%	7,311	101.7%	48,845	617
울산	5,375	8,595	159.9%	7,034	130.9%	5,462	101.6%	36,392	417
경기	54,375	91,840	168.9%	73,649	135.4%	54,973	101.1%	369,485	5,623
강원	7,563	12,462	164.8%	9,793	129.5%	8,411	111.2%	51,778	1,165
충북	7,500	10,743	143.2%	8,735	116.5%	7,468	99.6%	49,722	702
충남	10,438	19,703	188.8%	14,800	141.8%	12,527	120.0%	71,613	1,208
전북	9,375	14,858	158.5%	13,811	147.3%	11,954	127.5%	65,026	1,100
전남	10,188	15,755	154.6%	11,933	117.1%	10,190	100.0%	70,796	1,241
경북	12,875	20,952	162.7%	14,513	112.7%	13,695	106.4%	87,112	1,778
경남	16,250	27,049	166.5%	19,487	119.9%	17,807	109.6%	112,953	2,043
제주	2,310	3,504	151.7%	3,430	148.5%	2,905	125.8%	15,785	508

- 인원 및 예산

- 시도별 인원 참가율은 경기도가 전체의 21.7%, 서울이 20.6%임
- 시도별 예산 비중은 경기도가 21.2%, 서울이 19.9%를 차지

<그림-2> 희망근로 시도별 인원 및 예산비율



Ⅲ. 희망근로프로젝트 국내의 사례

1.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국내사례

1) 공공근로사업

□ 개요 및 특성

○ 등장배경

- 1997년 IMF 구제금융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의 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실업대책의 하나로 도입

○ 공공근로사업의 개념

-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무상의 공적부조 대신, 정부 또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 주기 위해 실시하는 보상차원의 소득지원사업
- 유사한 개념으로 취로사업이 있는데, 이는 만성장기 실직자에 대한 사후대책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

<표-5>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의 비교

구분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 생활보호법 제11조
주체	-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
사업내용	- 생산성과 고용창출을 높일 수 있는 사업	- 단순 노무 중심의 사업
대상	- 구직확인서, 실업급여 비대상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신청	-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이 자활보호대상 가구 중 선정
절차	- 행정자치부 -> 지자체 -> 실직자 고용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읍면동 -> 취로사업장

○ 사업목적

- 일시적인 고용창출을 통해, 실직자의 생계보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 높은 사업추진 및 이를 위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즉,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으로의 전락을 예방

○ 사업기간

-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안정적인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실업자의 생계보호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실업문제를 위한 종합대책’(98. 3. 26)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 경제상황과 정부정책에 따라 2기간으로 구분
- 1차기간 : 중앙정부(행정자치부)가 사업을 주도한 기간으로 1998-2004년까지
- 2차기간 : 중앙정부가 공공근로를 지방정부에 이양한 2005년 이후의 시기

<표-6> 공공근로사업의 기간별 특징

구분	특징
1차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행안부) 주도 - 1998년 - 2004년 -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 및 소득지원 -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한 일자리 정책 - 공공근로의 규모결정 : 국내 실업률 수준, 공공근로의 소득효과 등 고려
2차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주도 - 2005년 이후 - 경기안정, 실업을 감소 - 획일적 사업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 - 행안부 정부주도하의 단순한 일자리 만드는 것 중단 - 지방분권에 맞춰 시도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공공근로 추진하게 사업이양 - 사업비 지원은 분권교부세로 통합

출처 : 윤형오, 임병인(2009),“공공근로 참가자의 노동행태와 경제적 영향분석.”

최근열, 장영두(2005),“공공근로사업의 성과평가.”

○ 추진내용

- 사업내용

- 중앙부처사업과 지자체 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추진
- 사업내용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
 - 정보화 추진사업
 - 공공생산성 사업
 -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 환경정화사업

<표-7> 공공근로사업의 내용

구분	중앙부처사업	지방자치단체사업
정보화 추진사업	전자도서관 D/B, 영상자료 디지털화, 지형도 전산화, 의약품아전관리 전산화 등	자치법규 전산화, 지방행정정보D/B구축, 국공유재산 전산화, 건축물 대장 전산화 등
공공 생산성 사업	능·원사적적지 정비, 주택개보수사업 지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숲가꾸기사업, 산업단지 기동지원 등	하천제방·소류지, 준용하천 정비, 농특확장 및 유희농지새산화 사업, 음식물쓰레기 및 숲가꾸기 산물 사료화사업 등
공공 서비스 사업	국가기록물관리, 저소득 아동생활지도, 여성복지도우미, 방문간호사업, 생활용품 재활용, 가정해체 예방상담, 저소득층 자활 및 창업지원, 경증장애인 도우미, 실직자지원안내도우미, 초중고 보조교사 등 부정불량식품 감시업무 보조 등	사회복지 및 공공시설 개보수사업, 장애인·독거노인 도우미사업, 학교급식지원, 청소년 공부방·어린이 놀이방운영, 장애인 도로 및 편의시설 설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 Food Bank 지원사업 등
환경정화 사업	국립공원정화사업, 자원재생사업, 4대강 수질 오염감시, 고속도로변 환경 정비사업 등	재활용품 선별, 폐목재 활용, 상수도보호구역 및 해안쓰레기 정화사업 등

- 특히 지자체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을 고려
 - 생산성이 높고 주민의 호응이 큰 사업
 - 중앙에서 지정하는 우선 추진사업
- 중앙부처사업과 지자체 사업으로 이원화하여 추진
- 참여자 현황
 - 연도별 현황
 - 특히, 1차기간인 '98년 5월부터 2004년까지 위의 4대유형 92개 사업에 총사업비 4조 2,372억원(국비 2조 5,101원, 지방비 1조 7,271억원)을 투입하여 3,619명 참여

<표-8>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연도별 현황(단위: 명, %)

구분	신청인원	선발인원	선발률(B/A)
계	5,169	3,619	70.0
1998	568	350	61.6
1999	1,940	1,439	74.2
2000	1,142	795	69.6
2001	641	447	69.7
2002	413	334	80.8
2003	268	163	60.8
2004	197	91	46.2

자료: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백서(1998~2004)」

- 연령별 현황

- 50대가 36.2%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40대 25.9%, 30대 16.3%의 순임

<표-9>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연령별 현황(단위 : 명, %)

구분	인원	연령별					
		20대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3,619(100%)	50(1.4)	460(12.7)	589(16.3)	937(25.9)	1,312(36.2)	271(7.5)
1998	350	3	33	69	94	105	46
1999	1,439	19	187	269	390	472	102
2000	795	12	104	121	208	302	48
2001	447	6	58	61	112	183	27
2002	334	4	43	39	75	144	29
2003	163	2	19	19	38	71	14
2004	91	4	16	11	20	35	5

자료: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백소(1998~2004)」

- 학력별 현황

- 초교졸이 40.1%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고졸 24.4%, 중졸 21.6%의 순임

<표-10> 공공근로사업참여자의 학력별 현황(단위: 명, %)

구분	계	초등	중등	고등	전문	대학
계	3,269(100%)	1,312(40.1)	706(21.6)	798(24.4)	168(5.2)	285(8.7)
1999	1,439	552	327	370	72	118
2000	795	327	170	186	40	72
2001	447	185	92	107	23	40
2002	334	144	67	75	19	29
2003	163	69	34	36	9	15
2004	91	35	16	24	5	11

자료: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백소(1998~2004)」

- 직업별 현황

- 실업상태 이전의 직업은 일용근로자가 29.8%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회사원 13.9%, 주부 13.7%, 제조 서비스업 10.2%의 순임

<표-11>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직업별 현황(단위 : 명, %)

구분	인원	자영업	회사원	일용근로	제조 서비스	학생	농림수산	주부	기타
계	3,619 (100%)	187 (5.2)	503 (13.9)	1,079 (29.8)	370 (10.2)	202 (5.6)	174 (4.8)	497 (13.7)	607 (16.7)
1998	350	19	79	91	12	-	28	41	80
1999	1,439	88	222	432	201	78	67	155	196
2000	795	41	96	252	80	52	35	113	126
2001	447	19	51	135	37	30	20	74	81
2002	334	12	34	98	24	24	15	63	64
2006	163	5	14	47	10	10	6	33	38
2004	91	3	7	24	6	8	3	18	22

자료: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백서(1998~2004)」

- 예산집행 현황

• 연도별 예산액 및 집행액

- 총예산은 4조 2,372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59.2%인 2조 5,101억 원, 지방비는 40.8%인 1조 7,271억원
- 이 가운데 2003년까지의 총 집행액은 4조 455억원이며, 이월액은 3,084억원임

<표-12> 공공근로사업의 연도별 예산액 및 집행액(단위: 억원, %)

구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예산액	42,372	7,801	15,124	7,898	4,589	3,711	1,809	1,440
국비	25,101	4,948	10,928	4,200	2,000	1,750	775	500
지방비	17,271	2,853	4,196	3,698	2,589	1,961	1,034	940
(국비:지방비)	(59.2:40.8)	(63:37)	(72:28)	(53:47)	(44:56)	(47:53)	(43:57)	(35:65)
집행액	40,455	6,946	14,507	8,307	5,110	3,581	2,004	-
이월액	3,084	655	1,201	733	182	267	47	-
불용액	430	200	70	59	30	45	25	-

자료: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백소(1998~2004)」

- 예산항목별 현황

- 인건비가 3조 1,159억원으로 7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사업비가 4,664억원으로 11.5%를 차지

<표-13> 공공근로사업의 예산항목별 현황(단위: 억원, %)

구분	계	인건비	사업비	교통비	재해보상 및 일반관리비
계	40,455(100%)	31,159(77.0)	4,664(11.5)	3,936(9.7)	696(1.7)
1998	6,946	5,890	390	623	43
1999	14,507	11,025	1,886	1,422	174
2000	8,307	6,146	1,179	817	165
2001	5,110	3,832	647	507	124
2002	3,581	2,715	399	363	104
2006	2,004	1,551	163	204	86

자료: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백소(1998~2004)」

- 사업유형별 현황

- 생산성 사업이 2조 1,306억원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공공 서비스 지원사업이 22.7%를 차지함

<표-14>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유형별 현황(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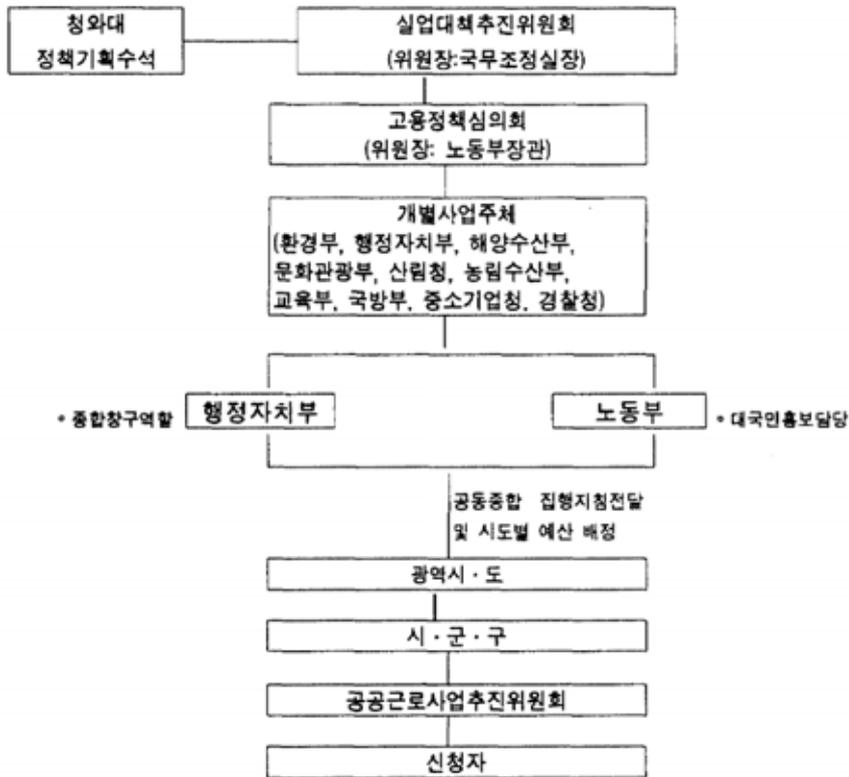
구분	계	정보화사업	생산성사업	서비스사업	환경정화 등
계	40,455(100%)	4,118(10.2)	21,306(52.7)	9,167(22.7)	5,864(14.4)
1998	6,946(100%)	62(0.9)	2,362(34.0)	1,459(21.0)	3,063(44.1)
1999	14,507(100)	1,596(11.0)	7,979(55.0)	3,482(24.0)	1,450(10.0)
2000	8,307(100)	1,105(13.3)	4,720(56.8)	2,003(24.1)	479(5.8)
2001	5,110(100)	619(12.1)	3,043(59.5)	1,115(21.8)	333(6.5)
2002	3,581(100)	468(13.1)	2,060(57.5)	747(20.9)	306(8.5)
2003	2,004(100)	268(13.4)	1,142(57.0)	361(18.0)	233(11.6)

자료: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백소(1998~2004)」

○ 추진체계

- 청와대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는 행정안전부가 공공근로사업을 총괄
- 청와대는 청와대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실업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

<그림-3>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체계



□ 추진사례

○ 동절기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사업

- 건설분야 일용직 근로자를 실업자로만 볼 수는 없으나, 동절기의 경우 계절적 요인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추진
- 기간은 1998년 11월 15일부터 1999년 2월말까지 추진
- 소요예산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기존 공공근로사업과 별도로 전액을 국비로 편성
- 그 이후부터는 기존 공공근로사업 예산 중 일부를 사용하도록 조치
- 건설 일용직 근로자 선발
 - 노동관서에서 운영하는 일일취업센터와 지자체에 설치된 일일취업안내소 및 취업정보센터 등 행정기관장 추천
 - 추천기준 및 자격 : 등록일 현재 만 18세 이상 - 60세 이하인 자
 - 유효기간은 1일단위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1회 추천 유효기간은 2주를 초과할 수 없음

○ 중소기업체 인력지원 사업

- 공공근로자 참여자들을 중소기업체들의 자금난과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 유의점은 기존 취업자의 대체효과 및 시장임금 교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원대상 기업체 및 실업자 선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
- 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령이 정하는 제조, 건설업 부문의 중소기업으로 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구·군 취업 정보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인등록 후 2주 이상 구인노력을 하였으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

※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 일정기간 공공근로 인력 활용 후 적합한 자
를 6개월 이상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약속하는 기업

- 지원인력 선발기준

- 통상적인 노동시장에 취업이 곤란한 자를 우선 선발
- 특히 직업안정기관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실업자
- 일용직, 고졸이하 신규졸업자, 고령자, 여성가장 등 고려

-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주관으로 공공근로사업 신청인력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개최

- 수요업체가 많을 경우

- 기업의 지원요구 인원수를 형평성 있게 배분
- 지원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추가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

○ 청년실업 대책사업

- 배경

- 2003년 청년실업자수가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이룸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

- 목적

- 청년층 고용확대

- 2004년 전체 공공근로사업비의 30%를 청년공공근로사업에 우선배정

- 대상

- 재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자

※ 졸업예정자, 구직등록 휴학생, 방송대 및 야간고교 및 대학 재학생에
계도 기회 부여

- 임금

- 참여자의 임금은 일당 27천원으로 하되, 교통비 등으로 1일당 3천원
범위내 추가 지급

○ 민간단체 참여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근로사업을 민간에 위탁

- 위탁의 범위

- 비영리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협회나 조합의 형태를 갖춘 단체로서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둔 단체

- 참여방식

- 사업위탁방식과 인력지원방식 중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

※ YWCA, 로터리클럽 등 사회봉사단체가 주류

□ 정책의 평가

○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고용창출

-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만연한 실업을 해결하고 경제를 지탱해 주는
핵심적인 지렛대의 역할 수행
-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

- 360여만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생계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국가경제를 유지

- 특히, 여성, 고령층, 저기술 근로자 등에게 도움을 제공

○ 생산성 위주의 사업 증가

- 초기에는 일부 비생산적인 사업의 추진도 있었으나, 추진의 시기가 거듭될수록 생산성 위주의 사업이 증가

○ 지역특성화 사업의 추진

- 인력규모의 산정, 사업의 추진, 일자리 제공 등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보다 고려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사업의 추진이 필요

- 공공근로 인력의 산정, 참여자의 배치 등에 있어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

- 아울러 공익성과 생산성, 일자리 필요계층을 위한 장기적인 고용창출 사업의 개발, 제시가 필요

2) 희망근로사업 우수사례

□ 우수사례 선정개요

○ 행안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수 및 미담사례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정리

○ 우수사례의 주요한 내용은 사업의 취지에 합당한 성과를 창출하거나 취약계층의 생계에 도움을 준 내용 등이 중심

○ 우수사례를 16개 시도별로 분류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제시

○ 우수한 사례의 내용을 제시함에 있어 내용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도면자료도 동시에 제시

□ 서울시

○ 『희망근로 복무 및 안전관리 보완 지침』 시달

- 근로자 복무와 우천·폭염에 대한 대응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함

□ 부산시

○ 희망근로 사이버 상황실 운영(해운대구)

- 네이버(naver)에 블로그를 개설하여 희망근로 사업 설명 및 작업사진, 동영상 관련정보를 게재하여 희망근로의 활동사항을 홍보
- 인터넷주소 : <http://blog.naver.com/jumincenter>

○ 간벌목 활용 등산로 정비 등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동구)

-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얻어진 간벌목을 활용하여 등산로 정비에 필요한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50백만원) 및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

○ 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환전 문자서비스 발송(남구)

- 희망근로상품권의 환전기간이 지나 환전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품권 환전기한은 유통기한으로부터 추가 7일 이내』라는 내용의 문자를 각 동 주민센터에서 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매월 2회 발송

○ 벽화그리기 사업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서구)

- 서대신 3동의 벽화그리기 사업에 지역 미술학원 원장이 작품선정, 스케치, 채색에 도움을 줌으로서 벽화그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

○ 희망근로 현장참여자에게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실시(기장군)

- 6.15~6.19, 9개 야외현장사업 현장참여자 224명

- 실시개요 : 야외현장참여자에게 가을철 발열성질환의 일종인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건강보건 증진에 기여

○ 해피하우스 봉사단에서 도배 등 기술지원(사하구)

- 신평1동 봉사단체인 '해피하우스 봉사단(단장 박삼규)에서 해피하우스 만들기사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도배, 장판교체 등 기술 지원

○ 새마을 부녀회 초화 3,000포기 기증 및 자원봉사활동(금정구)

- 금사동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금사공단지역 등 환경정비 사업장을 방문하여 초화 3,000포기 기증 및 자원봉사활동 전개

○ 부족한 재료비의 일부를 건물주가 자진 부담(해운대구)

- 해수욕장 주변 건물 옥상미관 개선을 위한 “건축물 옥상 환경개선 사업” 추진시 부족한 재료비 충당을 위해 건물주가 자진하여 재료비의 일부를 부담, 양질의 재료사용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 해당건물 50동(1천만원 정도)

□ 대구시

○ 희망근로사업 사무실용 컨테이너 기증(달성군)

- 희망근로사업 사무실(애로·건의사항 상담 및 해결, 작업 투입전 안전교육 장소)로 적극 활용 중

○ 희망근로사업 근로자 휴식용 의자 기증(달성군)

- 휴식용 의자 100개(100만원 상당)의 기증을 통해 희망근로 사무실내·외에 비치하여 근로자 휴식 용도

○ 희망근로상품권 지급 봉투제작(달서구)

□ 인천시

○ 장애인 편의시설 살피미 사업실시(부평구)

- 장애인이 직접 각종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보도 및 교통, 공공, 공원, 체육, 문화시설 등)을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 개선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

○ 여름철 해충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해충 기피제』 배포 (부평구)

- 희망근로 야외 현장 참여자에게 일본뇌염 등 해충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을 예방하고자 배포 (총 101개 사업, 2,898명에 배포)

○ 희망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 실시(강화군)

- 일부 참여자의 그릇된 의식으로 희망근로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참여자의 성실한 근무태도 확립을 위해 목표의식 정립 교육 실시 (폭염대비 응급처치 요령 교육 병행)

○ 아름다운 도보여행길 개설 및 정비사업(강화군)

- 강화의 아름다운 도보여행 길을 읍·면, 주제별로 다양한 루트를 개설하고자하는 사업으로 강화토박이 희망근로자를 참여시켜 각종 편의 시설 수요조사, 안내판 및 이정표 부착 등으로, 도보관광의 인프라 구축

□ 대전시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작업 투입 전 근로자 희망체조 실시

- 159개 사업장별로 매일아침 10분 정도 담당공무원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 실시, 근로의욕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줌

○ 지역주민이 트랙터 무상지원

- 유흥지(1,600㎡)에 고구마를 식재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아

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에 지역 주민이 발같이 트랙터 2대를 지원하여 고구마 5천본 식재

○ 주·야간 매일 정비 TOTAL CLEAN 프로젝트 실시(중구)

- 주간에는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야간에는 고장난 가로등 신고 및 청소년 선도·우범자 계도활동을 통해 지역내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에게 열렬한 호응을 얻음

○ 지역약국에서 희망근로자에게 비상약 지원(중구)

- 옥외 근무하는 희망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 인근 지역약국(석계동 석계약국)에서 소독약, 외상연고, 반창고, 소화제, 밴드, 감기약, 소염진통제 등 비상약(10만원 상당) 제공

○ 희망근로상품권 5%에누리 캠페인 본격 확산(대덕구)

- 전통 재래시장 상인회와 협약으로 “재래시장 상품 5% 에누리 (5% 할인 또는 5%덤 더주기)” 캠페인추진 (중리시장, 도마시장, 한민시장)

□ 광주시

○ 찾아가는 희망텐트' 운영(광산구)

- 희망근로 외근 사업장에 희망텐트를 설치하고 시원한 음료수 등 휴게 시설을 제공하고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의 장으로도 활용

○ 희망근로 사업장 근태관리시스템 가동

- 실시간 근태상황 전산입력 및 통계 등

○ 저탄소도시 만들기 사업(동구)

- 희망근로자들이 관내 시범아파트를 방문하여 새는 전력을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확인하게 하고 일상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적극 홍보하여 에너지 절약 및 대기환경보호

□ 울산시

○ 『희망근로 상품권』 지역단체 소비결연 추진(동구)

- 전체 동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외 7개단체) 회원과 저소득 희망근로 자간 결연 추진 (단체회원 1인 ↔ 희망근로자 1인, 상품권 구매액 1인당 10만원-20만원)

○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사업 참여소감 발굴·전파(중구)

- 입화산 산악자전거코스 조성사업에 참여 중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 참여에 대한 현장 소감 작성 및 공표
- 희망근로 소감 발표 및 전파를 통해 미래 희망근로 구직 대상자에게 상세한 현장 정보 제공
- 참여자들은 경력자와 비경력자가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유인 제공
- 사업종료시까지 안전사고 없이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유도
- 희망근로사업이 실직자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되어주기를 기대

□ 경기도

○ 희망근로사업에 민간단체 등 자율참여(광주)

- 경안천·목현천 꽃길조성 희망근로사업에 장애인 자녀 학부모회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30~50대의 젊은여성회원 103명이 참여, 함께 근로함으로써, 활발한 사업현장 분위기 조성

○ 행정타운 보리 수확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수원)

- 수원시 권선구 행정타운 포시즌가든 3천㎡에서 희망근로자 50여명이 지난해 말 파종한 보리를 수확(보리 320kg 4가마), 탈곡과 정미작업을 거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6월말 보리밭에 코스모스를 파종

○ 폭염대비 응급조치 교육실시(안성)

- 일시 : 2009. 6. 12(금) 10:00~11:00 (1시간)/희망근로자 37명
- 장소 : 희망근로사업 현장(신령리 구문교 하천제방)
- 교육내용 : 폭염대비 요령 및 증상에 따른 응급조치, 열사병·일사병 발생시 응급처치법, 병원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 등

○ 고령자 중심의 희망근로 봉사단 운영(의왕)

- 연령이 70세가 넘는 고령자 5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의왕시 전지역의 복지시설, 독거노인, 수급자 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 등에 직접 방문하여 고장난 우산, 선풍기, 자전거, 기타 전자제품 등을 무료로 완벽하게 수리, 주변의 호감을 사고 있음

○ 희망근로 수첩배부 및 SMS 문자 발송(남양주시,안양시,과천시)

- 수첩제작배부 : 10,000부(남양주시)
- 희망근로 개요, 희망근로자 숙지사항, 관리자(감독공무원,관리요원) 숙지사항, 안전관리 실천수칙, 응급신고 및 안내전화, 연락처 등
- 희망근로 참여자 SMS 문자발송(남양주시,안양시,과천시)

○ 종합기동반 휴경지 콩식재로 취약계층 지원(평택)

- 죽백동 휴경지에 희망근로 종합기동반 15명을 투입하여 콩을 식재, 향후 수확물은 마을 취약계층에 전달

□ 충청북도

○ 희망근로 사업장에 운송장비 지원(청주)

- 강서2동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중 중앙자원(대표 강승구, 53세)에서 집게차 및 화물차(4.5톤) 각 1대를 지원하고 직접 운송 처리하여 희망근로자의 작업처리를 도움

- 공무원 희망근로상품권 구매계획 확정(옥천)
 - 옥천군 공무원 전 직원(619명)은 6월부터 11월분 급여시까지 희망근로 참여자 상품권 전체 4억 2천여만원중 2억 8백만원 정도를 구매
- 희망근로 사업장에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무상지원(청주)
 - 강서2동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중 주민 이홍세(남, 57세)씨가 시가 99만원 상당의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68개를 무상으로 증여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도움
- 희망근로 사업 홍보동영상 자체제작 및 TV홍보(충북)
 - 희망근로팀 및 도 공보관실이 협력하여 희망근로사업 소개 및 상품권 가맹점 모집 등에 관한 영상물 직접 제작후 TV홍보

□ 충청남도

- 희망근로 사업장 폐목으로 노인요양시설 땃감 제공(서천)
 - 희망근로 사업장(야생화단지) 폐목 5톤을 생명수교회(근흥면 신진도리) 노인요양시설에 땃감으로 전달
- 등산로 정비 등 산림내 사업장 보호안경 배부(서산시)
 - 17개 사업장 320개
- 전통시장상인회장, 희망근로상품권 자발적 순회교육 실시(청양)
 - 4개 전통시장 상인회 등 소매사업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상품권 가맹대상업종, 취급요령, 유통상 주의할 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소매사업 직능단체의 가맹점 일괄 등록 유도
- 희망근로사업장 건초를 축산사료로 사용, 일거양득의 효과 거양(연기)
- 희망근로사업장 잡목 수거, 사회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땃감 전달(연기)

- 열린하천조성 사업장 부산물 축산사료로 제공(보령)

□ 강원도

- 희망근로 사업장 관리카드 활용으로 사업관리 효율화
 - 관내 전 시군에서 희망근로 사업장 관리카드 및 농촌일손돕기 관리카드(표준서식) 활용으로 사업관리 효율화 도모
- 마을주민과 함께 소공원 정비
 - 마을공원 정비사업에 마을 주민들과 희망근로자들이 화합하여 휴식공간(정자) 완성
- 마을이장 마을환경정비사업 참여자에 밀짚모자 제공(정선)

□ 전라북도

- 유�휴토지 경작 및 수확물 불우이웃돕기(정읍시)
 - 재일교포에 의해 제공된 유�휴토지(33,000㎡)에 국화꽃 묘목을 식재, 향후 마을주변 꽃길조성에 활용할 계획이며, 국화꽃 전시 및 묘목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예정
- 희망근로 사업의 청년회 지원
 - 국도 3km구간에 국화묘목 6,000본을 식재하는 '웰빙꽃길조성사업'에 면청년회에서 지원, 함께 식재작업 수행
- 쓰레기매립장을 자연생태체험 학습원으로 조성(전주시)
 - 전주시 우아동 호동골 소재 쓰레기매립장을 테마식물 군락지 등 자연생태 체험장으로 조성하여 혐오시설을 지역민이 즐겨찾는 명소로 전환 예정 (참여인원 : 200명)

□ 전라남도

- 마을주민의 희망근로사업장 꽃나무(철쭉) 500주 제공(순천)
 -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중인 순천시 낙안면 내동마을에서 마을주민이 철쭉 500주(50만원상당)를 기증하여 마을진입로변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기여
- 희망근로 작업반장의 경운기 자발적 운용(장흥)
 - 대덕읍의 '초당체육공원 정비 및 풀베기' 사업에 참여중인 2조반장 오종남은 자신의 경운기를 물건 운송 및 가까운 거리이동 등에 운용하여 참여자들의 수고 경감
- 희망근로사업 참여 사망자 유가족 사업장 방문, 간식 전달(여수)
 - 지난 6월 5일 사업장에서 사망한 참여자의 유가족 대표(4명)가 고인이 참여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참여자 26명에게 20만원 상당의 간식 제공
- 등산로 정비 사업에 지역주민 자재 무상제공(장흥)
 - 삼비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 지역주민이 등산로 계단 및 울타리 조성에 쓸 나무를 무상으로 제공
- 탐진강 꽃길조성 사업장에 개인용 화물차 2대 자발운영(장흥)
 - 희망근로 참여자 2명이 자신의 화물차를 자발적으로 운행하여 자재 및 꽃을 날라 고령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타참여자로부터 호평

□ 경상북도

- 중소기업 공단에서 희망근로자 전원에게 수건제공(성주)
 - 문방공단 등 28개 업체가 수건 250매 (100만원 상당)를 제공하여 용신 2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장밀집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희망근로 사업으로 추진함에 적극적인 지원 의사 표명

- 『희망근로 상품권』 Non-Stop 기동반 운영
 - 희망근로상품권 유통과정에서 근로자와 가맹점, 금융기관간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한 해결로 희망근로 사업 성과 제고
 - 본부 및 10개 읍면동 담당자 13명의 기동반체계 구성
- 하천정비 부산물 건초를 축산사료로 제공 (포항시)
 - 포항시 흥해읍 희망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비 사업의 부산물인 싱싱한 갈대 등 양질의 풀을 한우연구회 축산사료로 제공하여 일거양득의 효과 거양

□ 경상남도

- 희망근로 사업장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진해)
 -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장 설치를 통하여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편의 제공
-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를 위한 기업의 물품 협조(김해)
 - 김해시 산업·농공단지협의회에서 여름철 희망근로시 필요한 얼음조끼 20벌(50만원 상당) 희망근로사업 ‘아름다운 공단만들기’ 참여자에게 배부
- 상황판에 희망근로 사업장 안내지도 부착·활용(거창)
 - 관내 지도에 사업장명, 주요사업내용, 연락처 등 표시 용이성 도모
 - 지역주민 희망근로사업 포크레인 및 골재 지원
 - 지역별 사업장 현황 파악 및 효율적 관리, 사업장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에 기여
- 희망근로 임금지급 자동계산 프로그램 개발(합천)

- 희망근로 임금지급 자동계산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임금자동계산(시간급 포함), 일비, 교통간식비, 주·월차, 심장 관리수당 및 상품권 지급액 자동계산 등 임금지급의 효율성 증대 기여

- 프로그램의 구성 : 사용방법, 일일점검부, 입금확인서, 임금지급대장 등

○ 희망근로 임금지급 자동계산 프로그램 개발(합천)

- 합천군 초계면사무소 희망근로 담당에 의해서 사용방법, 일일점검부, 입금확인서, 임금지급대장 등에 대한 자동 프로그램 개발

- 임금자동계산(시간급 포함), 일비, 교통간식비, 주·월차, 심장 관리수당 및 상품권 지급액을 자동계산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 희망근로참여 대기자 관내 기업체 취업 알선(양산시)

- 40명의 희망근로 참여 대기자에게 참석자 면접 실시 후 8명을 고용함으로써 한시적인 희망근로사업 참여 대기자에게 장기적인 일자리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 제공

2.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국외사례

1)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특징

○ 공공 고용 프로그램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

-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른 한시적 실업대책으로서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대체적으로 세계 경제 호황기인 2000년 이후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07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불황이 시작되어 다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표-15> 주요국의 노동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
(2009년 8월 27일)

국가 연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2000	0.2	0.2	1.2	0.3	0.4
2001	0.2	0.3	1.2	0.3	0.2
2002	0.2	0.3	1.2	0.3	0.2
2003	0.2	0.4	1.2	0.3	0.1
2004	0.1	0.5	1.1	0.3	0.1
2005	0.1	0.4	0.9	0.2	0.1
2006	0.1	0.3	0.8	0.2	0.1
2007	0.1	0.3	0.8	0.2	0.1

출처: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database: Aug. 2009), Labour market programmes: expenditure and participants

○ 2008년 경제 위기와 소비 진작책

- 2007년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주요 금융기관 및 은행의 도산 사태와 함께 금융 위기로 이어졌으며, 거미줄처럼 얽힌 세계 금융 체계를 따라 세계 경제 위기로 발전
- 금융 부문에서 불거진 세계적 경제 위기는 연이은 제조업 도산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 생산 위축, 소득감소 및 세계 교역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사회문제화
- 단순 금융 대책만으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세계 여러 나라는 재량적 재정 정책으로서의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을 연이어 발표하여 적극적인 수요 견인에 나서고 있음

- 한국 역시 2008년 11월 '경제 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09년 3월 추경 편성안으로 보완하여 총 32.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음. ICT를 기반 기술로 건설, 운송 등에 활용하는 대규모 SOC 투자 사업인 녹색 뉴딜사업 등을 발표하여 2009년 정부의 SOC 예산이 24.7조원으로 전년 대비 26%나 증가(약 5조원 증가)
- 전세계적 극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세계은행(World Bank)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발표하는 등 경제 지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
-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앞으로 2조 달러 규모의 재정을 전 세계적으로 투입하기로 논의하여 경기 부양책의 확대 및 그 방안에 대한 고민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표-16> 주요국의 2008년~2010년까지 경기 부양책 구성
(2008년 GDP 비율 기준)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조세 대책	개인	-2.4	-0.6	-0.6	-0.1	-1.4
	사업	-0.8	-0.1	-0.3	-0.1	-1.2
	소비	0.0	-0.7	0.0	-0.1	-0.2
	사회기여	0.0	0.0	-0.7	-0.2	0.0
	총계	-3.2	-1.5	-1.6	-0.5	-3.2
지출 대책	예산소비	0.7	0.0	0.0	-0.2	0.0
	투자	0.3	0.1	0.8	0.3	0.9
	가계이전	0.5	0.1	0.2	0.5	0.1
	사업이전	0.0	0.0	0.3	0.4	0.5
	자치단체이전	0.9	0.0	0.0	0.3	0.2
	총계	2.4	0.0	1.4	1.5	1.7
2008 GDP 대비 순효과		-5.6	-1.4	-3.0	-2.0	-4.9

출처: OECD(2009), OECD Economic Outlook-Interim Report. p.111

-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상기 흐름에 따른 “한국식 뉴딜정책”으로서 경기 부양 및 소비 진작책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쿠폰 형태의 보수 지급

-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단기간 사용가능한 쿠폰을 지급하여 단기간의 소비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노리고 있음

- 덧붙여 대기업에 의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문제와 연계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시책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음

2) 구체적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례

- 본 보고서에서는 상기 고찰한 바대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성격을 공공 고용 프로그램, 2008년 경기부양대책, 쿠폰 지급을 통한 단기간의 경기부양의 3가지로 구분하여 고찰
- 첫 번째, 두 번째 성격과 관련해서는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선도 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관련 사례와 관련이 큼
- 세 번째 '쿠폰지급을 통한 단기간의 경기부양책'으로는 일본의 1999년 사례와 대만에서의 최근 정책 사례가 있음

□ 미국

- 공공 고용 프로그램의 발전
 - 최초의 공공 고용 프로그램(public employment programs)은 대공황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 졌음
 - 1929년의 경제 대공황으로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미국 정부는 1933년 5월 긴급구호업무를 담당하는 연방비상구제청(Federal Emergency Relief Administration)을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뉴딜정책이 추진
 - 테네시강 유역 종합개발(TVA)을 추진하여 연 평균 200만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 1933년에 설립된 민간보존단(Civilian Conservation Corp.)은 약 20억 달러를 사용하여 총 250만 명의 청년을 삼림보존사업에 동원. 1935년에 설립된 WPA(Works Progress Administration)는 향후 8년간 2500개의 병원과 5900개의 학교건물, 13000개의 운동장을 건설 개수하였으며, 200만 명 이상의 고교생 및 대학생과 260만 명의 비취학 청년들에게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였음

-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으며 대공황이 끝남에 따라 프로그램은 중단되었으나 1961년 지역 재개발법(Area Redevelopment Act)이 제정되면서 1962년 인력 개발 및 교육법(Manpower Development and Training Act)과 연계하여 공공 고용 프로그램이 재시작
- 1961년부터 1965년까지는 공공근로촉진법 공공근로 및 경제 개발법을 제정 시행하였는데 공공근로사업실시,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으로 연방부서인 경제개발청은 전체사업비 지원규모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발굴 및 추진방식을 각 자치단체에 일임함
- 1970년부터 1971년까지는 공공근로영향 프로그램(Public Works Impact Program)을 마련하여 실업률 8.5% 이상 및 가족의 50% 이상이 빈곤선 이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연방 의회의 뒷받침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
- 1973년부터 1974년까지는 일자리 창출 및 실업부조를 위한 긴급조치법(Emergency Job and Unemployment Assistance Act)을 제정 시행하였는데, 월 평균 66만 명의 실업자를 고용하여 시설물을 유지 개선, 공공 및 사회서비스, 환경보호 및 보존, 공공시설물 건설 등 7개 사업을 추진
- 1977년부터 1980년까지는 공공근로고용법(Public Works Employment Act)을 시행하여 실업률 6.5%이상인 주를 대상으로 40억 달러를 투입하여 주로 공공건물, 학교, 상하수도, 도로 및 보도 건설 등을 통하여 매월 20만 명의 고용을 창출
- 이어서 1983년 긴급 고용창출법을 제정, 건설업을 만 명의 약 32만명을 투입하였고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부문의 경쟁. 강화를 통하여 고용창출 전략을 병행 추진하였는데,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를 통한 고용보호에 중점
- 빈곤자에 대한 사회구제책으로서의 공공교육프로그램은 후속법으로 1964년의 경제적 기회 법안(Economic Opportunity Act), 1973년의 종합 고용 교육법안(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1982년의 직업 교육 파트너십 법안(Job Training Partnership Act), 1996년의 개인의 책임 및 직업 기회 조정법안(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1998년의 직무 투자 법안

(Workforce Investment Act)과 직무 및 기술 교육 법안(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Act) 등이 제정되며 발전

- 공공 교육 프로그램은 발전 과정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피고용인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에서 경제적 노약자 및 복지 수혜자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성격이 변화해 왔음 (Barnow and King, 2000)
- 특히 1996년의 직업 기회 조정법안 제정은 미국의 복지 정책을 근로 중심으로 변화시켜 공공 고용 프로그램을 복지 정책과 연관시켰고, 공공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public-service employment programs)들을 증가시킴
- 복지 개혁은 미국의 각 주들이 저소득 계층을 위한 임시 조력 보조금(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block grants)을 일정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들에게 공공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음
- 이는 97년 금융위기 당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던 공공근로 사업과 달리, 저소득 혹은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는 현 정부의 희망근로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1998년 6월 통계에 따르면, New York 주와 Wisconsin 주에서는 매달 35,000 명의 저소득 계층이 다양한 형태의 공공 근로 사업에 고용되었음 (Brodsky 2000)

○ 2008년 경제 위기와 소비 진작책

- 2009년 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미국 경기부양법안(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Stimulus Bill)은 향후 10년 동안 약 7,872억 달러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법안은 약 3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 또는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약 5,000억 달러에 이르는 직접 지출과 약 2,890억 달러의 조세 지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에너지 및 환경, 과학기술연구, 사회안전망, 교육, 의료, 세액공제(tax credit), 사회간접자본, 국가 안보 등의 영역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에 걸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희망근로프로젝트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저소득 빈곤가구를 위한 경기 부양책은 세액공제(tax credit) 프로그램, 현금이전 프로그램, 푸드스탬프 및 기타 현물 서비스(care) 프로그램의 3가지로 볼 수 있음
- 근로장려세액공제("Making Work Pay" tax credit)은 소득의 6.2%를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제공하며, 연간 최고 상한은 1인당 400달러임.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800달러)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의 경우, 실제로 면세받은 금액이 자신의 세액공제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됨
- 현금이전 프로그램으로는 공적연금, 빈곤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 퇴역군인 관련 급여(Social Security, SSI, and Veterans Benefits)에 대한 추가 금액 지급을 들 수 있음. 2008년 11월과 12월, 2009년 1월의 해당 수급자들은 경기부양법안에 의해 1인당 250달러의 일시금을 추가로 받게 됨. 세액공제 프로그램이 주로 임금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 일시금은 은퇴노인, 장애인, 퇴역장교 등과 같은 비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라 할 수 있음
- Food Stamp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은 현재 미국 전체적으로 약 1400만 가구 32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대표적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임. 경기부양법안은 약 200억 달러를 Food Stamp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금액의 대부분(약 190억 달러)은 Food Stamp 최고 급여를 13.6% 인상하는데 충당되기로 되어 있음

□ 영국

○ 공공 고용 프로그램의 발전

- 영국의 공공근로사업은 고령자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경제능력이 없거나 노동능력이 없는 계층에 노동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수직적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내포하여 고령자들의 파트타임근무 장려와 청소년 고용훈련 및 고용촉진이 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오일쇼크가 한창이던 1975년부터 노동당 정부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Community Program)”이라는 이름 하에 다양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능력을 회복시켜 재취업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춤
- 1988년부터는 지역사회프로그램을 종합훈련 및 근로경험 프로그램 (Unified Training and Work-experience Program)으로 대체

○ 2008년 경제 위기와 소비 진작책

- 영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약 200억 유로(국내총생산의 1%)의 세금을 감면할 예정

□ 독일

○ 공공 고용 프로그램의 발전

- 사회보장제도가 다양하게 발달된 독일의 공공근로사업은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집약적 사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실업률 감소와 재취업 가능성에 중점
- 공공근로 참여자는 1년 중 최소한 6개월 이상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된 실업자로 한정하였고 장기실업자·장애자 및 고령근로자 등을 사업 참여 우선대상으로 하여 통일 이후 1일 25만명 이상에게 근로기회를 제공
- 공공근로사업 내용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비중을 감소시키고 사회복지분야에 1년간 위탁하는 것을 원칙

○ 2008년 경제 위기와 소비 진작책

- 2008년 12월 12일에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제안된 재정지출 확대 및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의 경기부양대책에 대해 27개 회원국들의 합의가 이루어짐
- 독일은 영국이나 스페인 등 여타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주택시장이나 소비자 신용시장의 버블문제가 거의 없고 수년간의 재정규율 노력으로 인해 재정 상태는 상대적으로 건실한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성장기여도가 높은 수출이 자동차와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급감하면서 고용안정을 위해 내수부양 위주의 경기대책을 추진
- 독일 정부는 2009년 중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제시
- 경기부양책의 주요내용은 학교, 공공인프라, 통신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차원의 투자확대이며, 추가적으로 소비증진을 위한 소득세법조정 및 세금환급, 저소득층 지원확대, 건강보험료 축소 등을 고려
- 2009년 2월 현재, 모든 성인에게 500유로(약 95만 원) 소비쿠폰(총 350억~400억 유로)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
- 이외에 자녀 1인당 100유로의 양육비를 일시불로 지급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연식이 9년 이상된 중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500유로의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일본

○ 공공 고용 프로그램의 발전

- 일본의 공공근로사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량실업사태와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에 실업자를 일시적으로 취업시켜 재취업까지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었고 이에 1949년 긴급 실업대책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실시
- 공공근로사업은 노동성과 경제안정본부와의 협약에 의거 추진되었는데, 주로 공원, 운동장 등 정비사업, 가로수, 도로 및 수로 정비사업, 중소하천정비사업, 환경위생 및 항만정비사업, 공공기관 사무보조사업 등을 실시
- 사업비부담은 국고에서 2/3를, 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주체가 1/3을 부담
- 1954년 건설성 소관으로 도로 및 도시계획사업을 긴급 취로대책사업으로 실시하여 70% 이상의 실업자를 흡수
- 195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고용사정이 호전되어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으로서 비경제 활동인구에 대한 구호정책의 성격을 띠었고 공공근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 등 부작용으로 1995년 긴급실업대책법을 폐지

○ 2008년 경제 위기와 소비 진작책

- 일본은 19-64세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2000엔(약 18만 9600원)씩,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각각 2만엔(약 31만 6000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
- 1999년 저소득층에게 1인당 2만엔 상당의 소비쿠폰을 나눠 준 적이 있음

□ 대만의 경기부양을 위한 쿠폰지급 사례

- 대만정부는 경제 위기에 따른 소비 진작책으로 2009년 1월 18일 모든 대만국민에게 NT\$3,600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 상품권 지급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간소비 촉진이기에 때문에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키로 함
 - 전국에 있는 14,202개의 수금센터(collection center)에서 상품권 지급 대상자의 약 91.29%에 해당하는 21백만 이상의 개인이 이 날 상품권을 수령
 - 대만정부에서는 약 2,326만 명을 상품권 수혜자로 추산
 - 1월 18일에 상품권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규정 연휴가 끝난 후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 20세 이상의 대만인의 경우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상품권 통지서를 지참하고, 지정 장소에 방문하면 상품권 수령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상품권을 대신하여 수령 가능하며,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호적카드(household registration card)만으로도 충분
 - 대만인과 혼인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외국인 거주자 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 카운터에서 상품권을 수령해야 함
 - 직접 상품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효한 ID와 호적을 갖고 있는 다른 대만인을 통해 상품권을 대리수령하는 것 또한 가능
- 2009년 9월 30일까지 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초과하면 무효가 됨
 - 액면가액 NT\$500 상당의 상품권 6장과 액면가액 NT\$200 상당의 상품권 3장,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 식별이 불가능해 타인이 사용하더라도 제재 불가
- 구입품목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상가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면제되는 노점상이나 의료, 복지, 교육 기관 등에서는 사용불가
- 정부가 상품권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위해 국회에 특별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2008년 12월 26일 국회의 최종적인 승인을 받음
 - 2008년 12월 5일에 <상품권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08년 12월 26일에 관련 예산이 국회통과
- 정부가 상품권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위해 국회에 특별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2008년 12월 26일 국회의 최종적인 승인을 받음
 - 2008년 12월 5일에 <상품권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08년 12월 26일에 관련 예산이 국회통과
- 효과
 -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국내소비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만정부는 당초 소비쿠폰이 경제성장률을 0.6%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반향이 커 목표치를 1%로 상향조정했음

3. 시사점

1) 국내 사례 시사점

- 경제안정에 기여
 -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획

- 우리나라 총 일자리 300만개 가운데 26만개 정도를 창출함으로써 당초 재정정책의 성과를 창출
- 특히 경제위기 시에 생활 등에서 애로를 겪기 쉬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데 기여
- 아울러 취약계층의 경제상황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경제 전체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

○ 추진시책의 진화

- 당초의 일회성 취로사업에 대한 우려와 달리 지역의 생활환경 등 지역사회의 편익증대에 기여
- 특히 상품권 등과의 연계적 시책추진으로 인해 전통시장을 상품화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아울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발굴, 추진 뿐 아니라 지역사회,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도 활성화
- 상당수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차원의 시책이 진화를 하고 있음

○ 주민생활에 기여

- 실업자, 차상위 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 소득확보 등을 통해 주민의 생계에 보탬이 됨
- ‘09년 11월까지의 한시적 사업추진이라는 시간의 제약이 이 사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경제가 성장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고용의 안정성이 부족한 계층의 생계의 애로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

○ 사업내용의 진화 및 정책성과 분석 필요

- 일본의 경우, 주민의 수요와 편익,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의료사회,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보육, 수발, 지역복지사업, 지역진흥사업 등의 고용촉진시책을 강화

-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지역주민의 수요가 크고 고용창출효과가 큰 시책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

- 동시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과분석이 필요

○ 적정규모 산정 필요

- 경기상황, 실업율, 지역산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정책의 대상의 추출이 필요

- 국가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경제상황, 실업율, 산업구조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규모를 산정

- 아울러 지역별 경제여건, 고용상태 및 특성 등의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적정한 규모의 산정이 필요

○ 시책평가를 통한 개선

-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투입, 과정, 산출 측면의 평가지표를 개발

- 개발한 지표를 토대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계속성, 사업규모, 개선방안 등을 도출

2) 국외 사례 시사점

○ 미국사례의 시사점

- 지난 약 20여년 간 미국의 사회정책, 특히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사회정책은 '근로기반 사회안전망(Work-based safety net)'으로 요약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일을 하게하고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소득지원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원칙. 이러한 원칙은 1996년 복지 개혁이후 더욱 강화됨. 1996년 이전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복지프로그램이었던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가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대체되면서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현금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하는 것, EITC와 같이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프로그램이 직접적인 현금급여보다 강조되고 확대되고 있음

-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경우, 이러한 미국의 복지정책 추세와 유사한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자활을 유도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됨
- 미국의 공공근로정책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의 한계상 고실업 시기에 비상수단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 결과 대량 실업자를 위한 노동집약적 사업으로 생산성 효율성에 문제점이 나타남
- 미국은 이러한 비판에 의거하여 공공근로 사업 추진이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참여대상자의 선정,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집행시기, 임금수준 등을 신중히 결정
- 특히, 공공근로사업의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위탁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민간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위주로 추진
-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경우, 6개월 동안의 한시적인 사업으로써,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위탁으로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함
- 반면 참여대상자의 선정,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집행시기, 임금수준 등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 영국사례의 시사점

- 영국의 공공근로사업은 실업문제를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해결한다는 원칙에 의거 시행되었으며 고령자와 청소년층에 집중되는 다양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음.
-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경우, 그 주 사업이 4대 랜드마크 사업이나 등산로 가꾸기 등의 육체노동과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영국의 사례와는 잘 맞지 않음. 그러나 20대, 30대에게는 청년인턴사업, 40대, 50대에게는

희망근로사업이 2008년 세계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된 대책이 되어준 반면, 10대나 60대 이상에게는 특별한 대책이 없음을 고려하면 영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있음. 한국에서도 청년층 및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희망근로사업이 필요함

○ 독일사례의 시사점

- 독일의 공공근로사업 내용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비중을 감소시키고 사회복지분야에 1년간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독일의 원칙은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오랜 봉건제도의 역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잘 발달되어 있는 독일의 상황과 중앙 위주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다가 지방에 많은 부분을 이양해주는 추세인 한국의 상황은 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
- 다만 아우토반과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있는 독일의 특성상,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강조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는 독일의 추세는 미래의 희망근로제와 유사한 한국 정부 공공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음

○ 일본사례의 시사점

- 일본은 195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고용사정이 호전되었음
- 이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으로서 비경제 활동인구에 대한 구호정책의 성격으로 변질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에 안주하려는 경향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1995년 긴급실업대책법을 폐지
- 일본은 또한 1999년 저소득층에게 1인당 2만엔 상당의 소비쿠폰을 나눠 준 적이 있으나 당시 국민이 쿠폰을 현금화해 저축하는 바람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음
- 일본의 사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먼저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기로 계획되었던 공공근로제가 2009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볼 때,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일본에서 나타난 경향과 같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단기기간의 경기부양책은 적절한 평가를 통해 종결할 필요가 있음
- 두 번째로 1999년 일본의 소비쿠폰 지급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단기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한을 두고 있긴 하지만, 상품권 할인을 통해 쿠폰을 현금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함. 이러한 역기능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만사례의 시사점

- 대만정부의 단기기간 소비 쿠폰지급은 예상 이상의 국내소비 회생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일어나고 있음
- 본 사례의 경우와 같이 국내 희망근로프로젝트의 큰 특징 중 하나인 단기기간 소비 쿠폰 지급의 문제점으로 반짝효과가 지적될 수 있음
- 또한, 향후 몇 개월에 걸쳐 판매될 것이 쿠폰 사용기간에 집중되어 판매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시될 수 밖에 없음
- 그러나 반짝효과에 불과하다면, 쿠폰 사용기간이 끝난 이후 급속한 소비 축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쿠폰 지급에는 단기 소비 진작 외에 재래시장 지원이라는 추가적인 목표도 존재하므로 반짝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IV. 희망근로프로젝트 적정 인원 규모산정

1.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적정 인원 규모

1) 기존 인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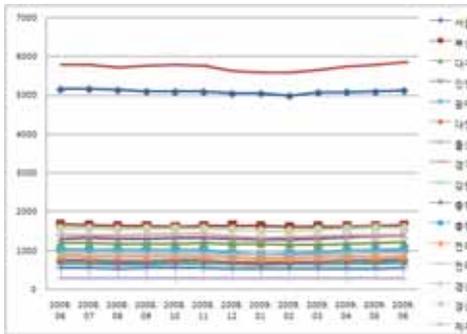
- 2009년 하반기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인원규모는 총 25만명으로 산정
- 배분기준
 - 시도는 실업자수와 비경제활동인구(40%), 인구수(30%),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30%) 합산하여 결정
 - 시·군·구는 인구수, 희망근로 수요, 공공근로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 기존 추계 방식
 - 사업액에 1일 인건비를 적용한 원단위법 적용
 - 즉, 기존 산정된 2009년 희망근로 인력 25만명은 총인건비 12,450억원을 인건비 기준으로 추정(830,000원×6개월=12,450억원)
 - 재료비는 인건비와의 3:1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
- 문제점 및 비교
 - 시행되고 있는 또는 향후 시행될 사업의 사업비 확보를 통해 간단하게 필요 인력의 계산 가능
 - 반면, 사업비를 통한 원단위법의 적용은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공급방안임

2) 지역경제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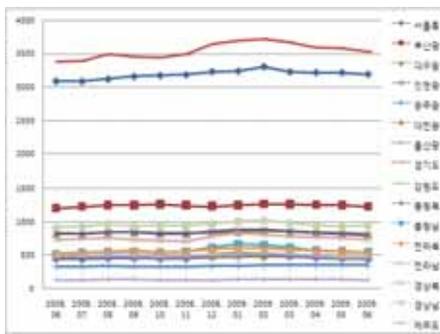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 및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 15세 이상 64세 이하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경기도와 서울시로 나타남
- 제주도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약 3십만명으로 서울의 5%, 경기도의 6%에 그침
- 반면, 경기도와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도 각각 350만명,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4> 경제활동인구(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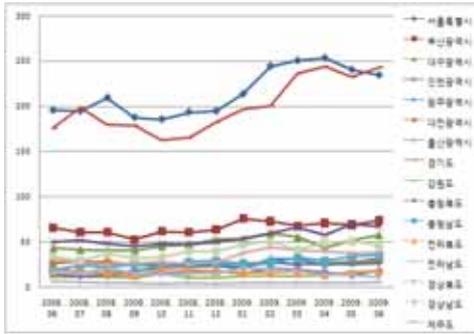
<그림-5> 비경제활동인구(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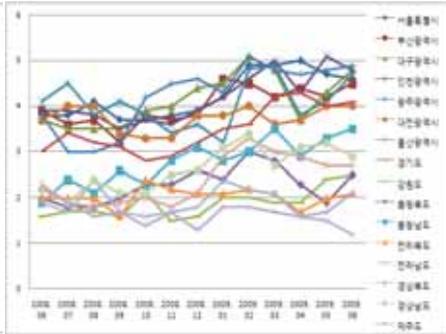
□ 실업자 및 실업률

- 2009년 6월 현재 실업자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서울과 경기도의 실업자수는 25만명에 달함
- 지역별 실업률 변동은 불규칙적인 형태를 보이나, 전반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시로 약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6> 실업자(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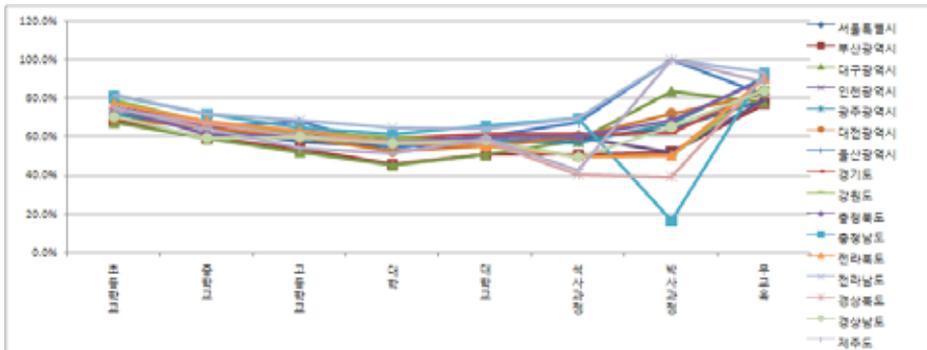
<그림-7> 실업률(%)



□ 비자발적 실업률

- 구직희망에도 불구하고 구직이 안되는 비자발적 실업을 학력별로 구분하여 살펴봤을 경우, 학력이 낮거나 높을수록 비자발적 실업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중 가장 비자발적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충남,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8> 교육정도별 비자발적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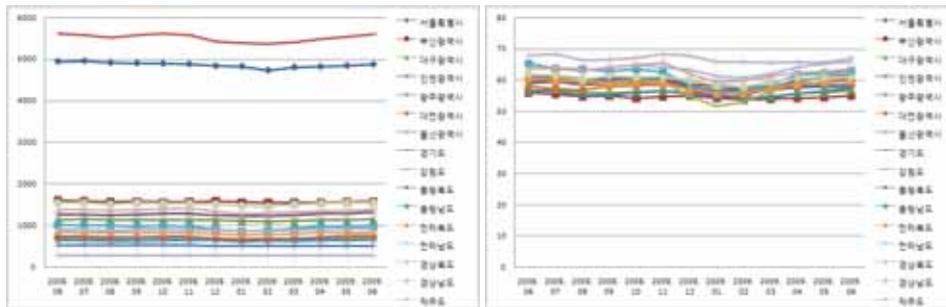


□ 취업자 및 고용률

- 지역별 취업자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시로 나타났으며, 다른 시도와의 격차는 약 3백만명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08년 6월 대비 2009년 6월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9> 취업자(천명)

<그림-10> 고용률(%)



□ 행정구역 인구 현황

- 경기도를 제외한 주요 대도시의 인구는 증가 후 소폭 감소 경향
- 각 년도 인구센서스를 이용하여 전국 16개 시도의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를 제외한 주요 대도시의 인구는 증가 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 1960년 전체 광역시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로 2000년에는 48%로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점차 늘어남
- 1996년 광역시 승격으로 인한 울산광역시의 인구를 포함한 전체 광역시의 인구는 2005년 인구총조사 기준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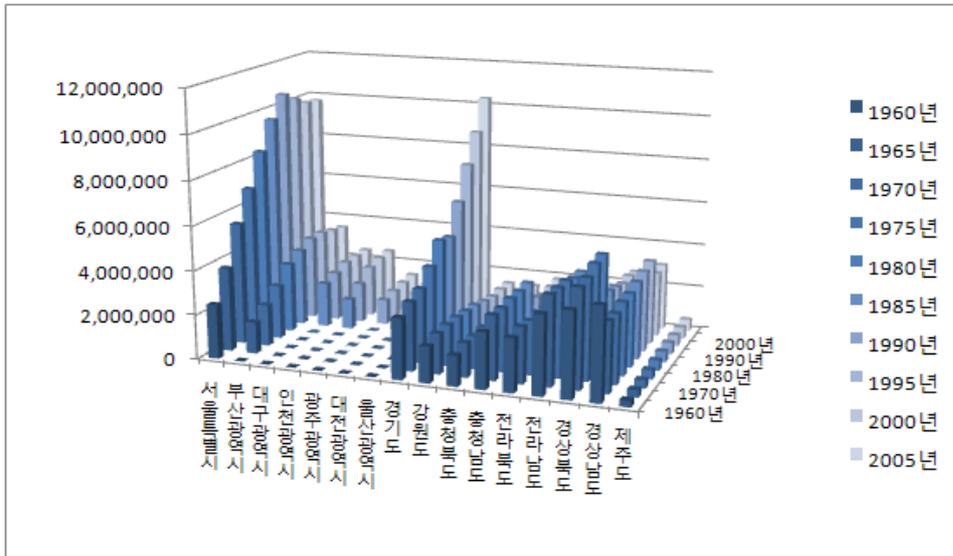
- 반면, 도의 인구는 1960년 전체 인구의 90%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5년 전체 인구의 53%로 감소함
- 이중 경기도 인구는 1960년 대비 2005년 276% 증가하였으며, 제주도는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라남도는 1960년 대비 46%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도 중 가장 인구감소가 큰 지역으로 나타남

<표-17> 시도 인구 추이(1960년~2005년)

단위 : 명

행정 구역	1960년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전국	24,989,241	29,159,640	31,435,252	34,678,972	37,406,815	40,419,652	43,390,374	44,553,710	45,985,289	47,041,434
서울 특별시	2,445,402	3,793,280	5,525,262	6,879,464	8,350,616	9,625,755	10,603,250	10,217,177	9,853,972	9,762,546
부산 광역시	-	1,426,019	1,876,391	2,450,125	3,156,931	3,512,113	3,795,892	3,809,618	3,655,437	3,512,547
대구 광역시	-	-	-	-	-	2,028,370	2,227,979	2,445,288	2,473,990	2,456,016
인천 광역시	-	-	-	-	-	1,384,916	1,816,328	2,304,176	2,466,338	2,517,680
광주 광역시	-	-	-	-	-	-	1,138,717	1,257,063	1,350,948	1,413,644
대전 광역시	-	-	-	-	-	-	1,049,122	1,270,873	1,365,961	1,438,551
울산 광역시	-	-	-	-	-	-	-	-	1,012,110	1,044,934
경기도	2,748,765	3,102,325	3,353,272	4,034,707	4,930,335	4,792,617	6,154,359	7,637,942	8,937,752	10,341,006
강원도	1,636,767	1,831,185	1,865,426	1,860,768	1,790,226	1,724,146	1,579,859	1,465,279	1,484,536	1,460,770
충청북도	1,369,780	1,548,821	1,480,338	1,521,348	1,423,381	1,390,326	1,389,222	1,395,460	1,462,621	1,453,872
충청남도	2,528,133	2,902,941	2,858,202	2,947,023	2,954,662	2,999,837	2,013,270	1,765,021	1,840,410	1,879,417
전라북도	2,395,224	2,521,207	2,431,892	2,455,093	2,286,720	2,201,265	2,069,378	1,900,558	1,887,239	1,778,879
전라남도	3,553,041	4,048,769	4,004,832	3,982,752	3,778,777	3,747,506	2,506,944	2,066,109	1,994,287	1,815,174
경상북도	3,848,424	4,472,895	4,555,866	4,855,852	4,952,012	3,010,001	2,860,109	2,672,498	2,716,218	2,594,719
경상남도	4,182,042	3,175,146	3,118,634	3,278,718	3,320,546	3,514,500	3,671,509	3,841,553	2,970,929	3,040,993
제주도	281,663	337,052	365,137	411,486	462,609	488,300	514,436	505,095	512,541	530,686

<그림-11> 시도 인구 추이(1960년~2005년)



□ 행정구역별 인구이동

○ 1970년-2005년간 인구유입은 서울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서울, 부산 등 주요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은 1970년, 1975년, 1980년에 주요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중 1970년 서울로의 인구유입은 전체 인구유입의 43%를 차지함
- 반면, 서울로의 인구유입은 1970년 43%에서 2005년 21%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경기도로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상쇄효과로 나타남
-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위 지역에서 경기도로의 인구유입은 전체 인구유입량 대비 1990년 15%에서 2005년 25%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도단위 지역의 인구유입량은 1970년-2005년 동안 일정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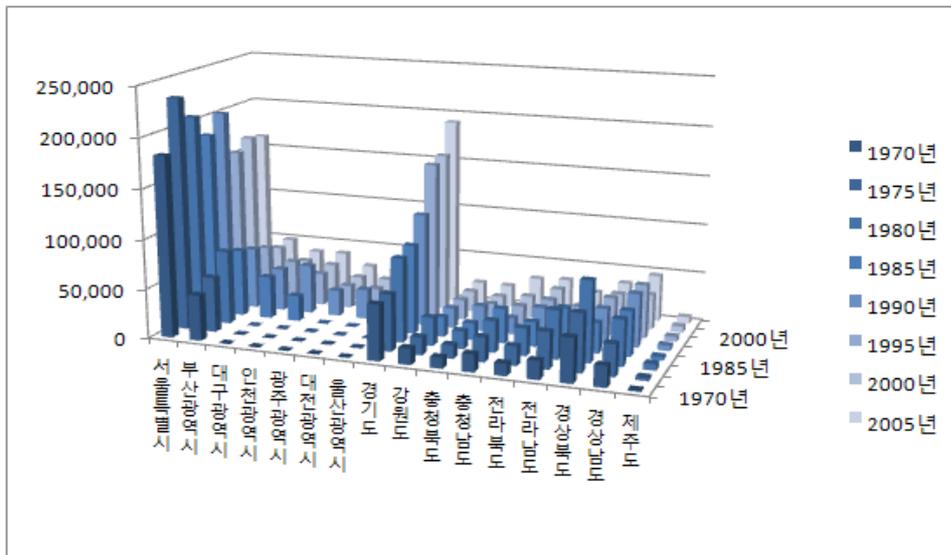
- 이중 경상북도로의 인구유입은 전체 유입대비 1980년 12%에서 2005년 5%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18> 시도 인구 총유입

단위 : 명

행정구역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전국	425,653	551,233	656,744	630,019	742,926	704,772	707,492	779,556
서울특별시	182,455	233,133	209,318	185,384	202,694	156,093	166,181	162,834
부산광역시	46,057	55,637	74,532	67,826	61,887	55,796	48,207	49,874
대구광역시	-	-	-	43,013	43,117	43,481	36,687	39,254
인천광역시	-	-	-	26,023	49,703	32,993	35,014	39,957
광주광역시	-	-	-	-	26,375	23,154	24,244	28,410
대전광역시	-	-	-	-	30,194	22,974	24,875	27,144
울산광역시	-	-	-	-	-	-	13,456	16,660
경기도	56,018	57,494	84,859	89,940	113,711	158,507	162,038	191,330
강원도	16,211	17,753	28,410	19,784	20,266	20,363	20,680	22,164
충청북도	10,802	13,332	18,156	16,892	25,550	19,344	18,456	21,592
충청남도	17,538	24,575	31,519	34,731	16,653	19,971	21,578	32,211
전라북도	12,134	19,291	27,526	24,786	30,163	29,566	32,396	33,962
전라남도	18,412	36,911	48,809	42,090	27,676	25,679	28,460	23,778
경상북도	43,980	58,139	80,977	30,457	35,791	37,854	33,294	36,201
경상남도	20,986	31,925	46,301	45,535	53,830	54,191	35,688	47,273
제주도	1,060	3,043	6,337	3,558	5,316	4,806	6,238	6,912

<그림-12> 시도별 총인구 유입



○ 1970년-2005년간 인구유출 역시 서울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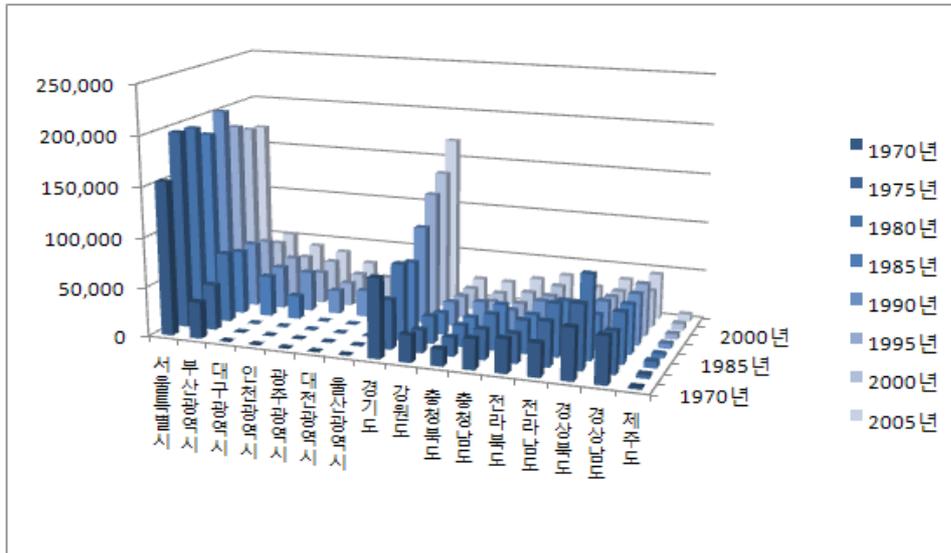
- 광역시 중 인구유출이 가장 크게 발생한 지역은 부산광역시로써 전체 인구유출 대비 1970년, 2005년 각각 7%이나 1970년 대비 2005년 인구유출 증가율은 46%임
- 인천은 광역시 승격이후 2005년 인구유출이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에서의 인구유출은 1970년 전체 인구유출 대비 30%에서 2005년 22%로 감소함
- 도 지역 중 인구유출이 가장 크게 발생한 지역은 제주도로써 1970년 인구유출 대비 2005년 인구유출은 3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경기도는 1970년 대비 2005년 인구유출이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는 1970년 대비 2005년 인구유출이 각각 -27%, -17%,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19> 시도 인구 총유출

단위 : 명

행정구역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전국	512,115	551,233	656,744	630,019	742,926	704,772	707,492	779,556
서울특별시	154,961	197,452	196,125	184,378	202,596	181,345	173,296	170,446
부산광역시	36,705	45,870	70,032	64,643	64,944	60,280	51,133	53,742
대구광역시	-	-	-	41,096	42,841	45,051	38,219	43,221
인천광역시	-	-	-	23,634	40,448	32,078	36,114	39,118
광주광역시	-	-	-	-	23,883	23,475	25,025	29,358
대전광역시	-	-	-	-	26,727	22,318	24,569	26,801
울산광역시	-	-	-	-	-	-	13,031	15,931
경기도	79,634	49,576	76,740	70,721	98,547	125,698	141,299	169,833
강원도	27,292	22,589	27,248	21,778	24,137	21,567	21,395	23,479
충청북도	16,665	18,781	21,378	20,237	27,510	19,537	19,365	23,111
충청남도	30,289	30,036	35,825	36,686	22,141	20,104	23,155	29,607
전라북도	33,530	29,132	32,991	29,515	34,626	31,042	33,006	36,198
전라남도	32,946	44,487	53,057	46,985	37,345	27,758	30,068	27,261
경상북도	51,448	64,719	84,806	36,207	40,948	36,582	33,798	37,796
경상남도	46,953	42,010	51,111	49,722	51,409	52,905	37,521	46,373
제주도	1,692	3,599	6,505	3,923	4,824	5,032	6,498	7,281

<그림-13> 시도별 총인구 유출



□ 산업인구

- 산업별 입지상법을 이용하여 행정구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면 광역시는 3차 산업이 특화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지역은 1차, 2차 산업이 특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입지상법(Location Quotient)에서는 전국 전산업 총고용자 대비 전국의 특정 산업 고용자 비중과 지역의 전산업 총고용자 대비 특정산업의 고용자 비중을 비교하여 해당지역의 비중이 높을 경우 해당 산업은 특화되었다고 평가함

$$LQ_a = \frac{(E_a^r/E^r)}{(E_a^n/E^n)}$$

E_a^r : 지역 r 산업 a의 고용자수

E^r : 지역 r의 총고용자수

E_a^n : 전국의 산업 a의 고용자수

E^n : 전국 총고용자수

- 서울의 경우 1980년 1차 산업 특화도가 0.41에서 2005년 0.1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2차 산업은 0.76에서 0.54로 감소함
- 반면, 3차 산업은 1980년 1.16에서 2005년 1.14로 지속적으로 특화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역시 3차 산업의 비중이 1차 및 2차 산업에 비해서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인천의 경우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고르게 특화된 것으로 나타남

- 1차 산업의 특화도가 감소한 도지역은 2차 산업의 특화도가 증가하여 도지역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대체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도지역은 1차 산업의 특화도가 증가하였으며, 산업 입지의 배분으로 인한 2차 산업 역시 1980년 대비 2005년 특화된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는 1980년 1차 산업 특화도가 1.78에서 2005년 특화도는 14.61로 매우 크게 1차 산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20> 시도 산업별 특화 분석

지역	산업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서울특별시	1차	0.41	0.43	0.73	0.33	0.05	0.1
	2차	0.76	0.81	0.83	0.69	0.65	0.54
	3차	1.16	1.12	1.11	1.12	1.12	1.14
부산광역시	1차	4.75	2.54	1.54	0.77	0.95	1.38
	2차	1.28	1.26	1.09	0.91	0.87	0.79
	3차	0.8	0.83	0.94	1.04	1.04	1.06
대구광역시	1차	0	0.01	0.28	0.07	0.08	0.2
	2차	0.61	0.54	0.51	0.68	0.63	0.61
	3차	0.41	0.47	0.5	0.63	0.63	0.65
인천광역시	1차	0.42	0.01	0.03	0.11	0.09	0.24
	2차	1.5	1.35	1.36	1.52	1.44	1.36
	3차	0.67	0.78	0.78	0.81	0.86	0.89
광주광역시	1차	-	0.02	0.72	0.1	0.1	0.32
	2차	-	0.41	0.61	0.66	0.63	0.71
	3차	-	1.37	1.24	1.14	1.13	1.09
대전광역시	1차	-	-	0.21	0.03	0.02	0.26
	2차	-	-	0.63	0.56	0.56	0.51
	3차	-	-	1.23	1.17	1.15	1.15
울산광역시	1차	-	-	-	-	0.48	0.16
	2차	-	-	-	-	1.7	1.62
	3차	-	-	-	-	0.77	0.81
경기도	1차	0.36	1.22	0.62	0.46	0.31	0.52
	2차	1.42	1.4	1.41	1.48	1.42	1.42
	3차	0.72	0.75	0.75	0.82	0.87	0.87
강원도	1차	1.27	0.65	1.26	1.6	1.29	1.91
	2차	0.9	0.81	0.65	0.56	0.5	0.48
	3차	1.07	1.12	1.21	1.16	1.16	1.15
충청북도	1차	0.61	0.95	2.1	0.55	0.43	1.41
	2차	0.85	0.8	0.95	1.11	1.13	1.2
	3차	1.1	1.12	1.03	0.96	0.96	0.94
충청남도	1차	1.18	3.75	2.98	1.45	1.54	2.47
	2차	0.91	0.75	0.82	1.05	1.16	1.37
	3차	1.06	1.15	1.1	0.98	0.95	0.88
전라북도	1차	0.34	0.86	1.49	0.92	1.17	2.09
	2차	0.75	0.78	0.71	0.78	0.75	0.76
	3차	1.17	1.14	1.17	1.08	1.08	1.07
전라남도	1차	0.62	1.38	1.85	11.32	8.86	3.81
	2차	0.68	0.7	0.72	0.71	0.71	0.81
	3차	1.21	1.19	1.17	1.05	1.05	1.05
경상북도	1차	1.24	1.26	1.37	0.66	0.84	1.76
	2차	1.07	1.04	1.12	1.21	1.34	1.41
	3차	0.95	0.97	0.92	0.92	0.89	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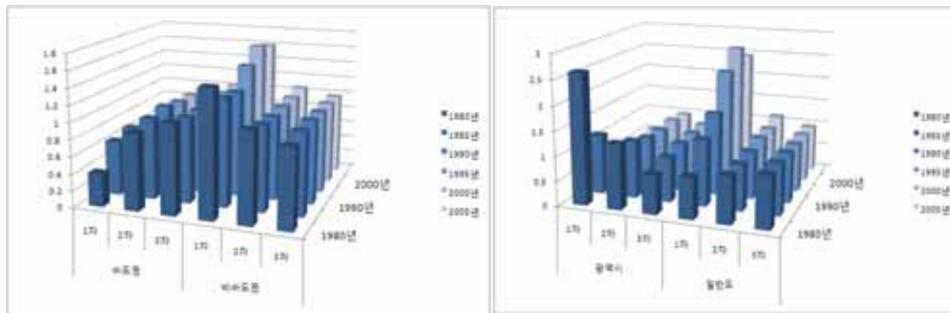
지역	산업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경상남도	1차	0.44	0.5	1.3	1.48	2.26	1.21
	2차	1.23	1.28	1.3	1.39	1.39	1.5
	3차	0.85	0.83	0.82	0.85	0.86	0.85
제주도	1차	1.78	0.64	2.79	1.88	13.15	14.61
	2차	0.29	0.22	0.24	0.21	0.2	0.22
	3차	1.48	1.49	1.46	1.3	1.2	1.2

- 대상지역을 수도권/비수도권/광역시/일반도 지역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특화분석을 연도별로 시행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3차 산업의 특화도는 유사한 패턴을 나타냄
 - 반면, 수도권의 1·2차 산업은 감소 및 소폭 증가한데 반해, 비수도권의 1·2차 산업은 증가 및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비수도권의 2차 산업은 1차 산업과 함께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특화 산업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비수도권의 3차 산업은 수도권에 비해서 특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지역을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그 외 일반도지역으로 구분하여 산업 특화도를 분석한 결과 광역시의 2차 산업 특화도는 증가한데 반해, 일반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광역시는 1980년에 비해 2005년 1차 산업 특화도가 급감하였으나, 반면, 일반도는 1980년에 비해 2005년 1차 산업 특화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도로의 1차 산업 특화 정도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3차 산업의 특화도는 광역시는 3차 산업이 특화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도는 특화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21> 권역별 산업 특화 분석

지역	산업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수도권	1차	0.4	0.65	0.7	0.38	0.16	0.29
	2차	0.91	0.97	1.01	0.97	0.96	0.93
	3차	1.07	1.02	1	1.02	1.02	1.02
비수도권	1차	1.51	1.29	1.26	1.49	1.66	1.6
	2차	1.08	1.02	1	1.02	1.03	1.06
	3차	0.94	0.99	1	0.99	0.99	0.98
광역시	1차	2.64	1.21	0.76	0.32	0.38	0.57
	2차	1.31	1.16	1.03	1.00	1.03	0.98
	3차	0.79	0.90	0.98	1.00	0.99	1.01
일반도	1차	0.83	1.34	1.67	2.37	2.74	2.46
	2차	0.94	0.93	0.96	1.04	1.04	1.13
	3차	1.04	1.04	1.02	0.98	0.98	0.96

<그림-14> 권역별 산업 특화(수도권/비수도권) <그림-15> 권역별 산업 특화(광역시/일반도)



- 광역시의 경우 1차 산업 성장률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와 광주로 각각 101%,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980년-2005년간 광역시의 산업 성장률은 1차 및 2차 산업이 감소하고 3차 산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중 대구의 경우는 1차 산업이 101% 증가하였으며, 광주는 40%가 증가하여 3차 산업과 함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변이할당법을 이용하여 행정구역 전체의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각 광역시의 산업별 성장요인을 분석하면 서울시의 경우 고용변화, 국가성장효과, 산업구조효과가 3차 산업에서 매우 크게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3차 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변이할당법에서는 지역의 고용 성장효과를 전국의 경제성장요인, 산업 구조요인, 경쟁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전국의 경제성장요인이란, 전국의 경제성장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이며, 산업구조요인은 산업의 전국적인 성장 특징이 지역 경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임
 - 또한, 경쟁요인이란 지역의 생산 환경의 특징으로 인한 지역의 성장효과를 의미함
- 도지역의 경우 3차 산업의 성장 파급효과가 1차 및 2차 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도지역의 산업 특화가 1차 및 2차 산업에서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화도가 1차 및 2차 산업에 비해 낮더라도 이로 인한 성장 파급효과는 3차 산업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표-22> 시도 산업별 경쟁력 분석

단위 : %, 명

지역	산업	성장률	국가 성장	고용 변화	국가 성장효과	산업 구조효과	경쟁 효과	순변화	총변화
서울 특별시	1차	-0.6	1.4	-1,169	2,505	268	-3,942	-3,674	-1,169
	2차	-0.4	0.3	-256,855	901,609	-682,948	-475,516	-1,158,464	-256,855
	3차	1	1.9	1,644,353	2,053,018	1,040,724	-1,449,389	-408,665	1,644,353
부산 광역시	1차	-0.5	1.4	-3,912	8,908	951	-13,771	-12,820	-3,912
	2차	-0.5	0.3	-178,114	468,735	-355,056	-291,793	-646,849	-178,114
	3차	1.5	1.9	532,502	437,811	221,937	-127,246	94,691	532,502
대구 광역시	1차	101	1.4	303	4	0.4	299	299	303
	2차	-0.1	0.3	-24,697	222,167	-168,287	-78,578	-246,864	-24,697
	3차	2	1.9	361,446	226,339	114,736	20,371	135,107	361,446
인천 광역시	1차	0.6	1.4	133	291	31	-189	-158	133
	2차	0.4	0.3	61,292	202,478	-153,373	12,186	-141,186	61,292
	3차	3.5	1.9	377,830	135,280	68,577	173,973	242,550	377,830
광주 광역시	1차	40.3	0.6	289	9	-5	278	273	282
	2차	1.4	0	69,114	36,255	-35,773	40,174	4,401	40,656
	3차	1.2	1.1	348,057	197,616	-30,184	25,510	-4,674	192,942
대전 광역시	1차	0.6	0.2	218	52	-19	49	30	82
	2차	-0.3	-0.2	46,928	25,826	-39,273	-7,246	-46,519	-20,693
	3차	0.6	0.6	345,684	82,689	49,784	-3,295	46,489	129,178
울산 광역시	1차	-0.8	-0.4	129	74	-355	-249	-604	-530
	2차	0	0	140,166	15,668	-12,079	-3,902	-15,981	-313
	3차	0.2	0.1	231,585	21,574	203	16,382	16,585	38,158
경기도	1차	5.9	1.4	2,874	607	65	2,202	2,267	2,874
	2차	1.6	0.3	615,112	466,990	-353,734	501,856	148,122	615,112
	3차	6.1	1.9	1,719,387	352,473	178,677	1,188,238	1,366,915	1,719,387
강원도	1차	2.1	1.4	1,192	720	77	395	472	1,192
	2차	-0.4	0.3	-32,134	99,370	-75,271	-56,234	-131,504	-32,134
	3차	1.7	1.9	236,312	176,799	89,624	-30,110	59,513	236,312
충청북도	1차	6	1.4	1,155	238	25	892	918	1,155
	2차	1.4	0.3	71,033	64,221	-48,646	55,458	6,812	71,033
	3차	2.2	1.9	216,746	124,310	63,016	29,421	92,436	216,746
충청남도	1차	2.9	1.4	2,309	998	107	1,204	1,311	2,309
	2차	0.5	0.3	62,999	150,830	-114,250	26,419	-87,831	62,999
	3차	0.9	1.9	181,060	262,053	132,841	-213,834	-80,993	181,060
전라북도	1차	13.2	1.4	1,970	185	20	1,765	1,785	1,970
	2차	0.3	0.3	17,784	79,835	-60,473	-1,578	-62,051	17,784
	3차	1.6	1.9	234,225	184,484	93,519	-43,779	49,741	234,225
전라남도	1차	7.8	1.4	3,608	577	62	2,970	3,031	3,608
	2차	-0.1	0.3	-7,313	123,779	-93,760	-37,332	-131,092	-7,313
	3차	0.5	1.9	130,504	329,272	166,916	-365,684	-198,768	130,504
경상북도	1차	2.4	1.4	2,187	1,130	121	936	1,057	2,187
	2차	0.7	0.3	111,479	190,147	-144,032	65,364	-78,668	111,479
	3차	1.6	1.9	336,186	253,912	128,714	-46,439	82,274	336,186

지역	산업	성장률	국가 성장	고용 변화	국가 성장효과	산업 구조효과	경쟁 효과	순변화	총변화
경상남도	1차	4.7	1.4	2,148	567	61	1,521	1,581	2,148
	2차	0.4	0.3	99,041	306,889	-232,462	24,613	-207,848	99,041
	3차	1.5	1.9	390,516	316,635	160,510	-86,629	73,881	390,516
제주도	1차	28	1.4	5,095	226	24	4,845	4,869	5,095
	2차	0.5	0.3	2,957	7,122	-5,395	1,230	-4,165	2,957
	3차	2.5	1.9	108,323	54,774	27,766	25,782	53,549	108,323

□ 산업생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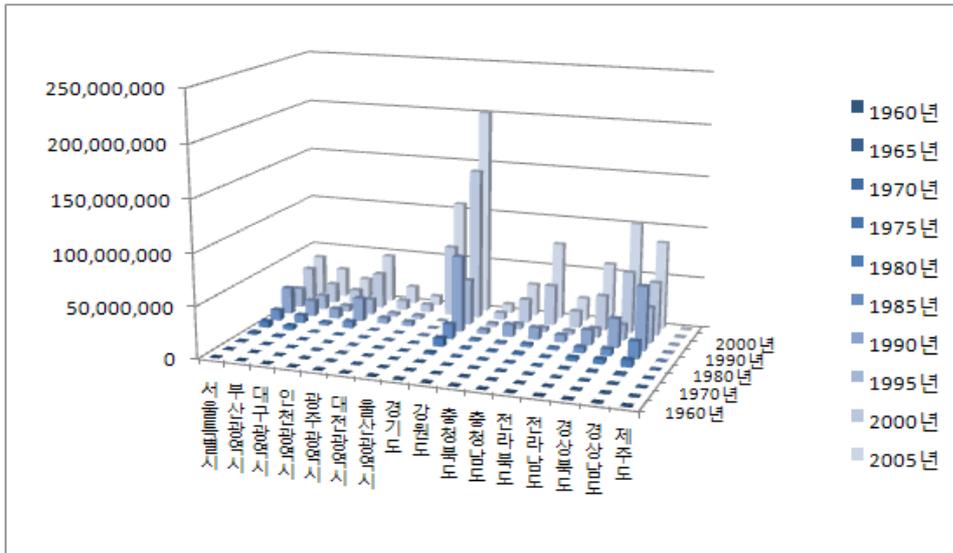
- 전체 생산액에 대한 광역시의 생산액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지역의 생산액은 광역시에 비해 일정한 비중을 유지 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960년의 서울의 산업 생산액은 전체 생산액의 29%였으나, 2005년 기준 전체 생산액의 5%로 나타남
 - 특히, 부산의 경우 1965년 전체 생산액의 17%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5년 전체의 3%로 생산액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울산은 중공업단지의 지역특성으로 인하여 전체 생산액의 12%-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도의 경우 광역시에 비해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1960년 전체 생산액의 10% 비중에서 2005년 24%로 급격하게 생산액 비중이 증가함
 - 또한 충청북도 역시 1960년 대비 2005년의 전체 생산액에 대한 비중은 1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강원도는 1960년 전체의 8%에서 2005년 1%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경상남도도 24%에서 10%로 감소하였으며, 제주도는 전체 생산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표-23> 시도별 산업 생산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1960년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전국	64,865	442,602	1,387,775	8,340,584	36,817,330	78,075,672	297,845,486	178,618,094	566,528,158	854,233,788
서울 특별시	18,802	140,103	444,951	1,907,052	5,879,095	10,242,866	25,909,514	18,606,866	32,983,145	39,073,202
부산 광역시	-	74,155	222,369	1,100,574	4,111,315	7,573,895	15,353,669	13,592,110	19,069,807	28,446,856
대구 광역시	-	-	-	-	-	2,701,961	9,574,046	5,783,907	15,187,545	20,097,413
인천 광역시	-	-	-	-	-	6,378,007	22,776,030	14,666,899	34,744,523	47,015,350
광주 광역시	-	-	-	-	-	-	5,248,849	3,006,075	9,026,658	16,815,700
대전 광역시	-	-	-	-	-	-	4,104,174	3,138,595	7,273,589	9,280,306
울산 광역시	-	-	-	-	-	-	-	-	69,153,560	107,743,219
경기도	6,491	45,278	178,122	1,576,915	8,172,554	14,411,456	74,466,591	44,538,983	147,611,063	200,826,360
강원도	5,262	24,694	49,284	200,148	788,207	1,680,522	4,122,458	2,891,158	6,661,875	8,541,795
충청북도	1,158	15,329	41,029	245,395	777,656	1,616,593	11,964,447	5,281,813	22,772,306	31,451,819
충청남도	3,386	26,243	82,064	323,062	1,448,021	2,781,128	11,509,715	4,135,387	39,253,634	75,168,102
전라북도	2,780	15,305	50,028	203,789	848,607	1,664,575	6,942,730	3,685,900	15,898,603	22,234,878
전라남도	3,252	22,123	41,806	505,139	3,380,602	5,477,159	14,729,459	8,966,282	34,160,452	59,332,709
경상북도	8,925	48,573	115,287	855,030	4,485,861	6,554,299	28,467,455	15,262,170	59,998,626	101,954,126
경상남도	14,660	29,242	158,913	1,410,471	6,885,359	16,919,706	62,381,032	34,883,046	52,165,309	85,399,918
제주도	149	1,557	3,921	13,008	40,053	73,505	295,317	178,903	567,463	852,035

<그림-16> 시도별 산업 생산액 추이



□ 지역내총생산

- 전체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지역별 기여는 광역시의 경우 서울과 도지역의 경우 경기도로 수도권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이 전체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으로의 편중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자료가 공표된 1985년 이후 서울의 지역내총생산은 1985년 전체 지역내총생산액중 26%에서 2005년 22%로 일정한 비중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서울 이외의 광역시도 일정한 지역내총생산 비중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1985년-2005년 동안 산업비중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에 비해서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도지역중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지역으로는 경기도로써 1985년-2005년 간 전체의 15%에서 22%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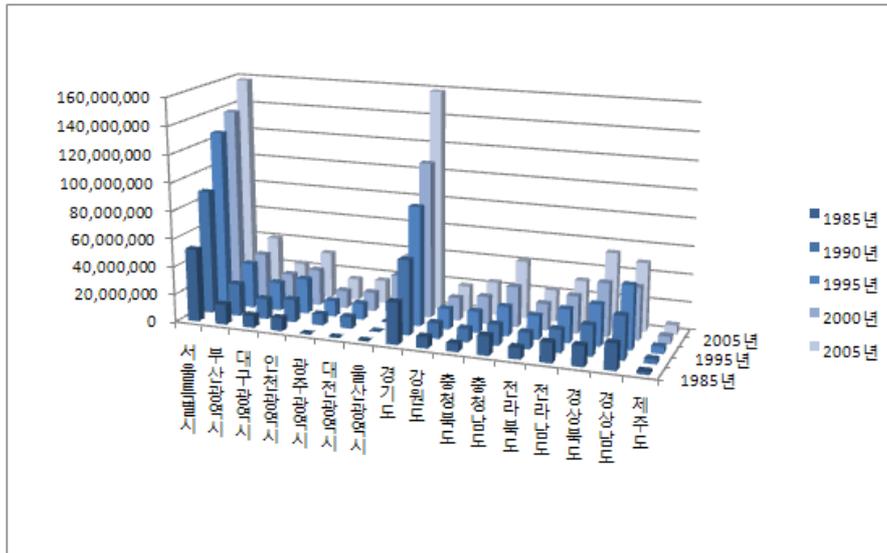
- 반면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지역내총생산액은 1985년 대비 2005년 일정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라도 전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한 지역의 지역내총생산 증가 비중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24>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단위 : 백만원

시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전국	200,387,140	332,274,083	485,493,634	577,970,942	730,121,176
서울특별시	52,411,282	88,925,802	127,110,656	138,492,266	158,304,122
부산광역시	14,430,746	23,235,544	32,500,602	33,839,838	40,815,222
대구광역시	8,779,457	14,537,975	20,364,899	20,776,260	23,000,935
인천광역시	9,293,516	16,366,412	25,247,368	26,230,654	33,219,335
광주광역시	0	7,840,124	11,386,933	12,628,813	15,431,675
대전광역시	0	8,366,175	11,617,775	13,559,020	16,442,392
울산광역시	0	0	0	28,355,275	36,415,245
경기도	30,010,360	53,665,445	85,755,745	111,793,461	158,694,332
강원도	8,047,218	11,067,782	14,800,680	16,462,239	18,888,731
충청북도	5,881,700	9,540,047	15,153,938	19,521,392	23,900,139
충청남도	13,862,014	14,900,606	20,941,551	28,962,820	41,403,366
전라북도	8,190,666	11,763,631	16,819,535	18,977,807	22,564,979
전라남도	14,241,606	16,329,010	23,929,502	26,907,552	31,675,777
경상북도	14,484,061	21,728,029	29,586,021	38,445,650	53,902,299
경상남도	18,686,413	30,770,931	45,360,747	37,728,411	48,961,442
제주도	2,068,101	3,236,570	4,917,682	5,289,484	6,501,185

<그림-17>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추이



□ 재정자립도

- 최근 12년간 재정자립도는 광역시보다 도지역에서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광역시는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대량의 차이가 도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크므로 인하여 단순 감소만으로는 설명의 한계가 있음
 - 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가 1997년 대비 13%p 감소하였으며, 광주, 부산이 각각 -30%p, -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천, 대전은 -10%p의 감소대를 나타냄
- 도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광역시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를 제외한 모든 도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6%p에서 -35%p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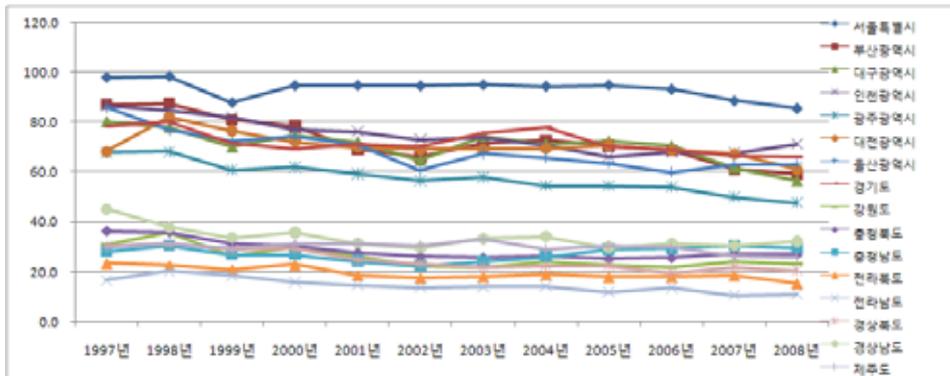
- 반면 경기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도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광역시 최소 재정자립도의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 최소 재정자립도의 50% 미만 도지역은 1997년대비 2005년 재정자립도가 매우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재정자립도 악화에 따른 재정자립 빈곤 현상은 시간에 따라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25> 시도별 재정자립도

단위 : %

행정구역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국평균	63.0	63.4	59.6	59.4	57.6	54.8	56.3	57.2	56.2	54.4	53.6	53.9
서울시본청	98.1	98.5	88.1	94.8	94.9	94.7	95.1	94.5	95.0	93.3	88.7	85.7
부산시본청	87.0	87.5	80.9	78.3	69.2	66.1	71.6	72.7	70.6	68.7	60.8	59.2
대구시본청	80.3	78.1	70.2	75.0	72.2	64.9	74.4	71.4	72.6	70.6	61.9	56.7
인천시본청	86.7	85.1	82.1	77.2	76.3	73.1	73.8	70.8	66.3	68.3	67.7	71.2
광주시본청	68.0	68.4	61.0	62.2	59.5	56.7	58.1	54.6	54.6	54.1	50.1	47.8
대전시본청	68.4	82.2	76.7	72.3	70.0	69.3	69.3	69.6	71.0	68.9	67.4	61.2
울산시본청	86.1	77.0	72.5	74.6	71.4	60.8	67.5	65.8	63.7	60.0	63.0	63.3
경기도본청	78.7	80.5	71.7	69.3	71.4	70.1	75.8	78.0	70.3	68.8	66.5	66.1
강원도본청	30.8	36.0	26.4	30.0	26.4	22.1	21.7	24.2	22.4	21.8	24.2	23.3
충북도본청	36.4	36.1	31.1	30.3	27.6	26.1	25.6	26.2	25.2	25.6	27.1	27.0
충남도본청	28.2	30.5	26.9	26.8	24.4	22.4	24.3	26.2	29.0	29.4	30.4	29.7
전북도본청	23.4	22.4	20.9	22.8	18.5	17.5	18.0	18.9	17.9	18.0	18.4	15.3
전남도본청	16.6	20.3	18.6	15.9	14.7	13.7	14.0	14.2	11.9	13.6	10.6	11.0
경북도본청	30.4	31.2	29.0	29.2	24.8	23.3	22.0	22.3	22.4	19.6	21.9	20.7
경남도본청	45.2	37.9	33.6	35.8	31.3	29.6	33.4	34.1	29.8	31.4	30.5	32.1
제주도본청	30.1	31.4	29.6	31.2	31.4	30.4	33.1	29.1	30.3	29.9	26.3	25.9

<그림-18> 시도별 재정자립도 추이



□ 지방세

○ 1970년-2005년 지방세는 수도권으로 지속적인 편중 현상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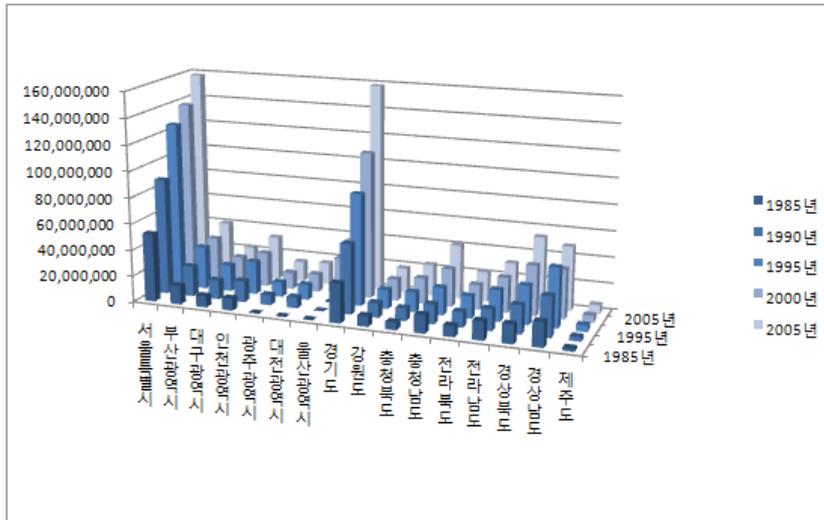
- 1970년 이후 서울은 전국 지방세 총액 대비 최소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경기도는 1990년 이후부터 전국대비 10% 이상, 2005년에는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으로 과편중현상이 나타남
- 반면 2005년 기준 광역시를 제외한 도지역의 지방세 총액은 경기도의 전국대비 37%보다 낮은 28%로 나타남

<표-26> 시도별 지방세

단위 : 백만원

행정구역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전국	24,217	92,954	651,366	2,369,343	7,566,267	8,119,054	12,400,839	14,264,538
서울특별시	15,727	54,963	311,959	706,314	1,910,818	3,967,202	6,335,333	8,681,783
부산광역시	2,908	13,500	86,000	160,850	459,415	1,175,724	1,398,302	2,058,644
대구광역시	-	-	-	84,881	270,099	777,469	928,590	1,302,503
인천광역시	-	-	-	75,275	108,579	637,300	1,034,320	1,543,821
광주광역시	-	-	-	-	119,803	279,890	462,276	677,703
대전광역시	-	-	-	-	227,597	407,422	539,532	803,794
울산광역시	-	-	-	-	-	-	463,303	622,657
경기도	577	3,014	37,713	192,587	725,521	2,487,850	4,150,248	5,280,000
강원도	192	660	4,944	39,481	127,818	340,700	500,088	414,600
충청북도	134	572	4,392	32,315	110,028	290,852	436,328	334,540
충청남도	310	1,147	11,096	79,088	125,293	356,440	612,390	696,000
전라북도	205	832	8,183	47,403	139,081	362,889	536,284	353,600
전라남도	327	1,309	12,614	79,698	153,563	310,832	548,438	332,865
경상북도	643	2,880	27,538	72,806	242,535	618,708	933,809	626,000
경상남도	355	1,514	17,898	113,960	392,528	1,098,586	1,022,308	1,033,400
제주도	48	318	2,325	13,673	44,911	150,116	232,925	243,055

<그림-19> 시도별 지방세 추이



2.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적정 인원수의 영향 변수

1) 지역경제 특성을 고려한 기본 모형 설정

-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재정력지수, 지방세, GRDP를 지역특성으로 고려
- 적정인원 추정에 따른 변수간 상관관계는 실업률, GRDP, 및 재정력지수를 제외한 변수에서 높게 나타남
 - 따라서, 단위근 검정을 통한 변수간 활용 검정 필요

<표-27> 상관관계 결과

구분	적정 인원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실업률	GRDP	재정력지수	지방세
적정 인원	1	0.99613	0.998332	0.364649	0.973816	0.573025	0.938754
경제활동인구	0.99613	1	0.997042	0.337832	0.981054	0.556837	0.925223
비경제활동 인구	0.998332	0.997042	1	0.376436	0.969986	0.587901	0.931555
실업률	0.364649	0.337832	0.376436	1	0.31297	0.915049	0.463879
GRDP	0.973816	0.981054	0.969986	0.31297	1	0.525269	0.921519
재정력지수	0.573025	0.556837	0.587901	0.915049	0.525269	1	0.685601
지방세	0.938754	0.925223	0.931555	0.463879	0.921519	0.685601	1

○ 단위근 유무를 이용한 안정성 검정

- 모든 검정방법에서 변수내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성 있는 변수로 판단됨

<표-28> 단위근 검정 결과

검정방법	통계량	확률
Null: Unit root (assumes common unit root process)		
Levin, Lin & Chu t*	-7.36343	0
Breitung t-stat	-1.61703	0.0529
Null: Unit root (assumes individual unit root process)		
Im, Pesaran and Shin W-stat	-6.74493	0
ADF - Fisher Chi-square	69.28	0
PP - Fisher Chi-square	99.0664	0
Null: No unit root (assumes common unit root process)		
Hadri Z-stat	1.8542	0.0319

○ 모형 및 결과

- OLS 산출식 : $\text{적정인력} = C(1) * \text{경제활동인구} + C(2) * \text{비경제활동인구} + C(3) * \text{실업률} + C(4) * \text{GRDP} + C(5) * \text{재정력지수} + C(6) * \text{지방세} + C(7)$

(적정인력 = 644.63 -0.40*경제활동인구 + 14.58*비경제활동인구 + 956.53*실업률 + 0.00001*GRDP - 75.19*재정력지수 + 0.0008*지방세)

- WLS 산출식 : $\text{적정인력} = C(1) * \text{경제활동인구} + C(2) * \text{비경제활동인구} + C(3) * \text{실업률} + C(4) * \text{GRDP} + C(5) * \text{재정력지수} + C(6) * \text{지방세} + C(7)$ (가중치: 재정력지수)

(적정인력 = 1261.01 -2.41*경제활동인구 + 17.74901444*비경제활동인구 + 316.20*실업률 + 0.00001*GRDP - 42.30*재정력지수 + 0.0008*지방세)

<표-29> 분석결과

변수	OLS			WLS		
	계수	표준오차	t-값	계수	표준오차	t-값
상수	644.6312	870.3262	0.740678	1261.011	942.2232	1.338336
경제활동인구	-0.400514	2.864114	-0.139839	-2.413552	1.840285	-1.31151
비경제활동인구	14.58243	3.83778	3.799703	17.74901	2.539745	6.988501
실업률	956.5336	598.8404	1.59731	316.1969	518.2557	0.610118
GRDP	1.08E-05	2.90E-05	0.373745	9.66E-06	1.72E-05	0.562415
재정력지수	-75.19184	30.11869	-2.496517	-42.30774	24.24649	-1.744902
지방세	0.000849	0.000296	2.86811	0.000798	0.000157	5.071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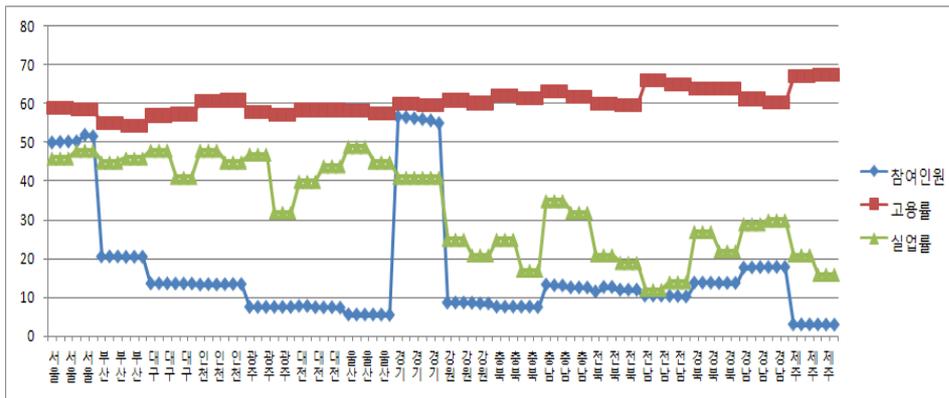
2) 변수간 인과관계를 적용한 추계

○ 기초통계분석

<표-30> 기초통계분석

분류	참여인원 (명)	고용률 (%)	실업률 (%)	15세이상 인구 (천명)	경제활동 인구 (천명)	가맹점수 (개)	예산 (백만원)	지원자
평균	16,281	60	3	2,506	1,553	19,320	106,534	24,178
중앙값	12,548	60	3	1,506	982	12,390	71,431	17,483
최대값	56,661	67	5	9,413	5,860	76,530	373,319	91,840
최소값	2,905	54	1	433	296	-	15,785	3,460
표준편차	14,768	3	1	2,501	1,544	17,756	101,254	21,611
왜도	2	0	0	2	2	1	2	2
첨도	5	3	2	6	6	4	5	7
Jarque -Bera	80	3	9	93	96	43	80	120

<그림-20> 지역별/변수별 추이



○ 변수 설정

- 희망근로 신청자, 참여인원, 예산, 상품권가맹점, 15세 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 7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일별 데이터를 이용한 시계열 데이터 구축
 - 희망근로 사업일수 기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7일 단위의 데이터 구축
- 그랜저 관계를 이용한 변수간 인과관계
- 일별 시계열을 이용한 희망근로 참여인원과 경제변수간의 관계 파악을 위해 1-4시차별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실시
 - 분석결과 15세이상인구는 가맹점수,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가맹점수는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활동인구는 가맹점수와 고용률, 고용률은 실업률, 실업률은 고용률, 예산은 가맹점수와 고용률, 지원자는 실업률, 참여인원은 가맹점수에 그랜저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됨
 - 희망근로 참여인원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률은 유의수준 0.5 이내에서 그랜저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31> 변수간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결과

변수	시차	15세 이상 인구	가맹점수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예산	지원자	참여인원
15세 이상 인구	1		0.209	0.99	0.288	0.689	0.75	0.529	0.771
	2		0.581	0.954	0.537	0.901	0.837	0.753	0.518
	3		0.871	0.967	0.708	0.965	0.924	0.849	0.731
	4		0.954	0.89	0.756	0.39	0.946	0.888	0.759
가맹점수	1	0.749		0.783	0.63	0.292	0.676	0.553	0.678
	2	0.905		0.92	0.894	0.551	0.859	0.801	0.854
	3	0.975		0.982	0.975	0.732	0.948	0.913	0.954
	4	0.988		0.992	0.993	0.874	0.969	0.95	0.98
경제활동인구	1	0.961	0.215		0.283	0.667	0.785	0.547	0.815
	2	0.951	0.593		0.531	0.887	0.84	0.766	0.558
	3	0.964	0.88		0.702	0.958	0.909	0.855	0.763
	4	0.872	0.958		0.751	0.382	0.953	0.912	0.842
고용률	1	0.5	0.921	0.525		0.246	0.49	0.443	0.52
	2	0.753	0.987	0.777		0.443	0.742	0.7	0.772
	3	0.865	0.992	0.885		0.566	0.855	0.831	0.885
	4	0.91	0.987	0.927		0.896	0.898	0.894	0.929
실업률	1	0.456	0.51	0.495	0.011		0.461	0.391	0.5
	2	0.722	0.833	0.763	0.022		0.727	0.652	0.759
	3	0.853	0.951	0.885	0.027		0.856	0.798	0.889
	4	0.599	0.886	0.615	0.066		0.6	0.573	0.597
예산	1	0.814	0.174	0.876	0.28	0.76		0.497	0.482
	2	0.845	0.516	0.851	0.529	0.935		0.789	0.457
	3	0.928	0.823	0.916	0.699	0.98		0.896	0.625
	4	0.945	0.933	0.959	0.77	0.381		0.94	0.739
지원자	1	0.568	0.342	0.601	0.426	0.543	0.478		0.559
	2	0.756	0.717	0.776	0.709	0.803	0.741		0.886
	3	0.825	0.927	0.835	0.858	0.911	0.828		0.838
	4	0.826	0.98	0.862	0.919	0.187	0.845		0.899
참여인원	1	0.745	0.204	0.774	0.308	0.646	0.48	0.554	
	2	0.474	0.575	0.519	0.567	0.872	0.417	0.874	
	3	0.692	0.836	0.732	0.749	0.95	0.593	0.92	
	4	0.716	0.936	0.821	0.833	0.305	0.704	0.97	

3.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적정 인원 산정

1) 적정 인원 산정 결과

○ 단위근 검정

- 구축된 자료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위근 검정을 시행함
- Hadri Z-stat을 제외한 검정방법에서 변수내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성 있는 변수로 판단

<표-32> 단위근 검정 결과

검정방법	통계량	확률
Null: Unit root (assumes common unit root process)		
Levin, Lin & Chu t*	-22.7597	0.00
Breitung t-stat	-11.5391	0.00
Null: Unit root (assumes individual unit root process)		
Im, Pesaran and Shin W-stat	-19.3691	0.00
ADF - Fisher Chi-square	241.238	0.00
PP - Fisher Chi-square	267.448	0.00
Null: No unit root (assumes common unit root process)		
Hadri Z-stat	-1.92387	0.9728

○ 벡터자기회귀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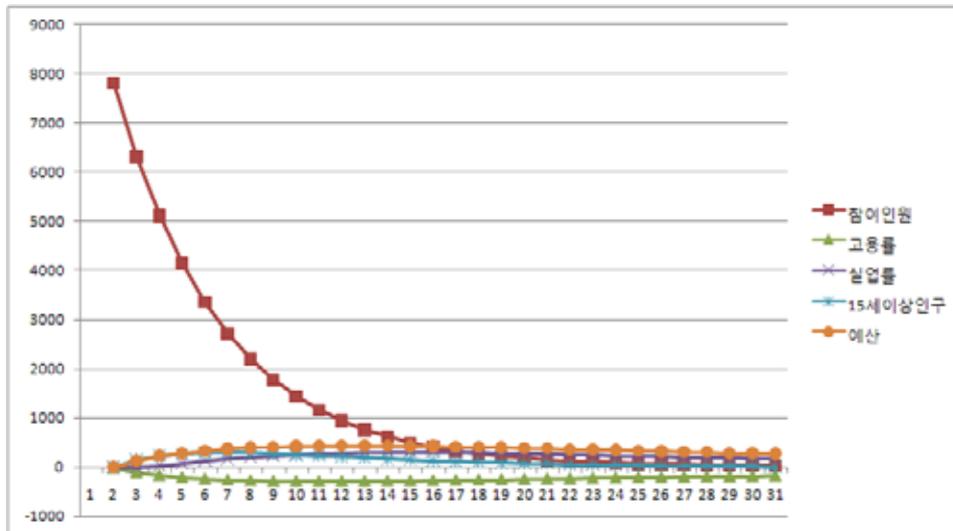
- 참여인원에 미치는 영향은 데이터의 특성상 1주일 전의 변수들로 설정
-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 참여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고용률, 실업률, 15세이상인구, 예산으로 나타남
- 고용률이 낮을수록 또는 실업률이 높을수록 참여인원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희망근로 지원 예산액이 증가할수록 참여인원수는 증가함

- 반면, 15세이상인구가 증가할수록, 즉 경제활동이 활발해 질수록 희망근로 참여인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33> 벡터자기회귀모형 결과

구분	참여인원	고용률	실업률	15세이상인구	예산
참여인원(-1)	0.362	0	0	-0.077	-2.882
고용률(-1)	-93.117	0.801	-0.023	-15.02	-561.206
실업률(-1)	154.731	-0.428	0.862	38.512	1,566.13
15세이상인구(-1)	-0.027	0.001	0	0.844	-2.057
예산(-1)	0.067	0	0	0.01	1.291
C	7,884.28	13.616	1.886	1,223.64	46,276.02
R^2	0.722	0.846	0.888	0.72	0.734
F-값	46.275	97.696	141.027	45.8	49.109
Akaike AIC	20.827	3.411	1.125	17.28	24.627
Schwarz SC	20.988	3.573	1.286	17.441	24.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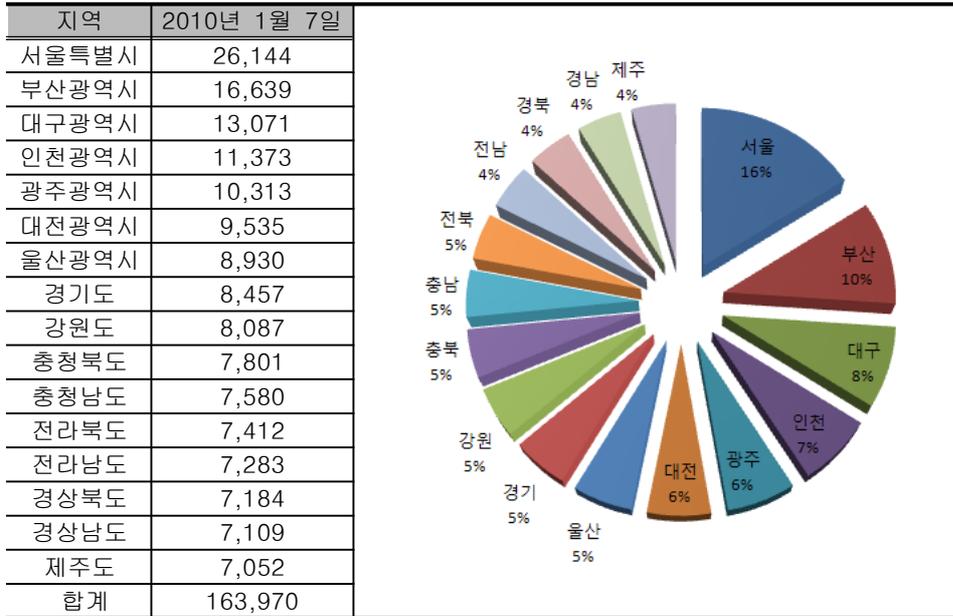
<그림-21> 참여인원 결정요인 변화 추이



○ 벡터자기회귀분석을 이용한 2010년 희망근로 적정 인원수 예측

- 고용률, 실업률, 15세 이상 인구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2010년 희망근로 적정인원수는 약 16만명으로 나타남
- 단, 실업률 및 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클 것으로 판단됨

<표-34> 2010년 지역별 희망근로수 예측 및 배분



2) 2009년 희망근로 인원수 산정 근거

- 2009년 희망근로 인원수 25만은 일차년도에 대한 인원수 및 독립변수들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 반면, 문제점의 존재를 가정하고 분석한 2009년 희망근로 인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실업률, 지역내총생산, 재정력지수, 지방세 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추정치 및 유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변수들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대안의 설정이 필요
- 따라서, 적정인원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경제 변수들을 제외한 새로운 변수를 고려한 모형식 필요
-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변수간 인과관계를 이용한 모형식 구축

3) 2010년 희망근로 적정 인원수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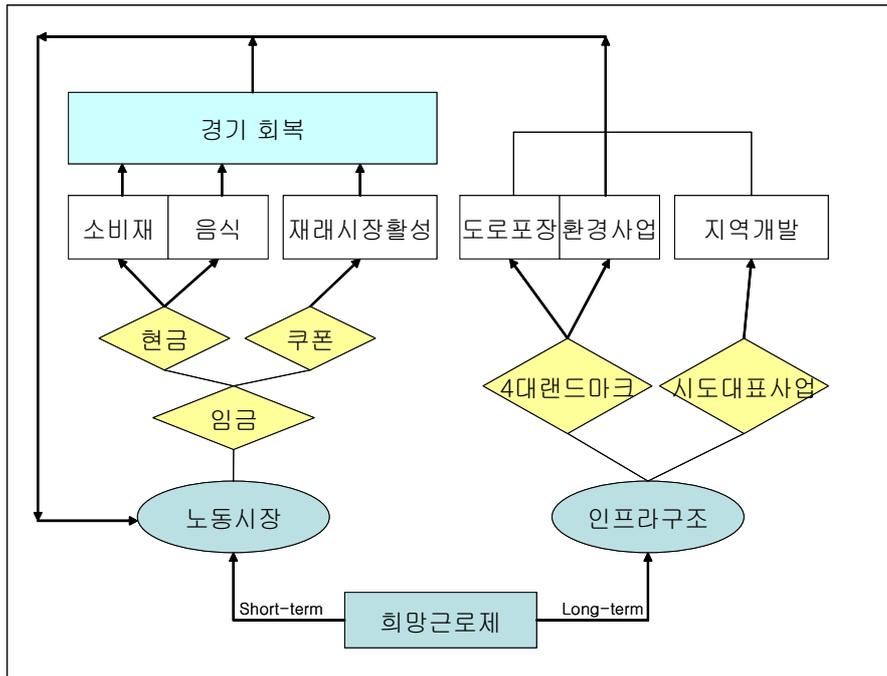
- 일차년도 희망근로 인원수의 예측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별 시계열 6개를 이용함
-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기 전 그랜저 인과분석과 단위근 분석을 이용하여 변수간 인과관계 및 자료의 안정성을 검증
- 주별 시계열의 이용한 모형식의 구축 결과 희망근로 적정 인원수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참여인원, 고용률, 실업률, 15세 이상 인구, 예산로 분석됨
- 모든 변수들의 시차는 1주일로 $t-1$ 주일 전의 독립변수가 t 주의 희망근로 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모형은 단순회귀식을 이용해 분석한 것에 비해 주별 시계열을 이용해 분석함으로써 인원수 산정의 타당성을 높였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별 시계열이 6주로 짧음으로써 장기 예측의 유의도는 낮음

V.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성과

1. 목표대비 경제적 성과

-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기 효과의 경우 2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함
 - 임금 지불을 통해 차상위 이하 어려움이 큰 계층의 소비재 및 식료품 구매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함
 -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의 매출을 증진시킴
 - 3개월 시한의 쿠폰 지급을 통해 신속한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 장기 효과의 경우, 인프라 구조 개선을 통한 장기적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프라 구조는 크게 국가주도 사업 및 지역 개발 사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가주도 사업은 4대 랜드마크 사업으로 요약되며, 백두대간 보호사업, 동네마당 조성사업, 공장진입로 확·포장사업,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을 의미
 - 4대 랜드마크 사업은 크게 도로 포장 및 환경 개선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음
 - 시도 대표 사업은 지역 숙원 사업 및 시도 고유의 개발 사업으로서 각 지역마다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임
 - 희망 근로 프로젝트의 목표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22> 희망근로 사업의 개요 및 목표 요약



- 본 보고서에서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를 나누어 평가를 시도하고자 하며, 종료된 사업이 아닌,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의 평가이므로 데이터의 미비 및 완결 사업의 부재로 인해 정확한 평가는 사후로 미루고 평가 가능한 부분 및 가능성을 중심으로 경제적 성과를 평가함

2. 단기적 경제적 성과

○ 실업률의 저하

- 경제 위기의 진행에 따라 2008년 12월에 이어 2009년 1/4분기의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 2009년 1/4분기의 취업자 수 감소는 월평균 14.7만 명에 달하였음
- 다음 표는 위기 이전 시기와 경제 위기 시기 및 희망근로 시기를 구분하여 실업자 수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음

<표-35> 시기별 실업자 및 실업률

기간구분	위기 이전시기		경제위기			희망근로 시작		
	2007	2008	2009	2009	2009	2009	2009	2009
	평균	평균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실업자 (만명)	78.3	76.9	95.2	93.3	93.8	96.0	92.8	90.5
실업률(%)	3.2	3.2	4.0	3.8	3.8	3.9	3.7	3.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년 10월 현재.

- 위기 이전 시기에 평균 76.9만 명이던 실업자 수는 경제위기를 겪으며 95.2만 명까지 증가하였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인 2009년 6월 통계를 보면 96.0만 명까지 증가하였음
- 2009년 5월 중순 이후 시작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그 경기 부양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2009년 7월부터 실업자 수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96.8만->92.8만) 가장 최근 통계자료인 2009년 8월의 자료에 따르면 실업자 수가 90.5만까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실업률도 3.7%로 경제 위기 이전인 3.2%에 근접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실업률이 줄어드는 상기 추세는 희망근로가 끝나는 11월 이후 2010년 1월까지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차상위 이하 어려움이 큰 계층의 생계유지

-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참가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 1.35억 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음

- 재산 과다 등 일부 취지에 부적합한 대상자가 선발된 사례가 있긴 했지만,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있음

- 6월 22일 조치를 통해 7월부터 재산과다 보유자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대체 또는 배제토록 조치하여 실질적으로 차상위 이하의 어려움이 큰 계층(다문화 가정, 여성가장, 비정규직 실직자 등)의 생계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음

○ 근로자 급여로 쿠폰을 지급

- 현금 50%, 쿠폰 50% 원칙을 통해 쿠폰 지급을 실시하여 다양한 효과를 고려하고 있음

- Friedman의 항상 소득 가설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희망근로 사업의 소득은 항상 소득이라기보다는 임시소득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현금은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

- 반면 쿠폰의 경우 그 용도 및 시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정책 방향으로 원하는 시기에 사용되게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본 사안의 경우에도, 대기업 보다는 중소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쿠폰의 사용처가 유도되어 있고, 경제 위기가 한창인 2009년 연내에 소비를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3개월이라는 한시적인 사용 제한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쿠폰지급 원칙은 50%이지만, 실제 상품권의 지급 비율은 30% 정도로 유지하고 있음. 이는 희망근로의 대상인 차상위계층(소득 2분위)의 월 소비 행태를 참조한 것임
- 2009년 1/4분기 통계청의 소득 2분위 가구(평균 3.34명)당 월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소비지출은 월 1,211,768원이며 그 중에서 상품권으로 소비가 가능한 식료품, 비주류음료, 의료, 신발, 주류, 담배, 음식, 숙박 등의 총 금액은 576,982(48%)원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희망근로 소득 83만원의 30%인 25만원 가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충분히 소비가 가능하며, 사용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금액으로 판단됨
- 더구나 2009년 6월 2일, 상품권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해 유흥업소, 대형 마트, 학원 등을 제외하고는 폭넓게 사용가능토록 조치하여 쿠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였음
- 다음 표는 시도별 상품권 공급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2009년 7월 기준)

<표-36> 시도별 상품권 공급 현황

(2009. 7. 8. 현재)

구분	상품권 소요수량				Gift Card	거래은행	교환방법
	계	1천원권	5천원권 (3천원권)	1만원권			
합계	1,434,880	7,630,642	18,794,607 (30,000)	17,117,136			
서울	12,434,880		9,326,160	3,108,720	-	우리은행	우리계좌
부산	3,665,440	504,310	126,130	2,025,000	-	부산은행 강서,기장- 농협중앙회	현금 or 계좌
대구	2,950,000		1,040,000	1,910,000	-	대구은행	대구계좌
인천					8개구 (강화.옹진제외)	가맹정 통장입금	계좌
광주	1,796,000		1,026,000	770,000	-	광주은행	현금 or 계좌
대전	2,538,959	1,103,895	883,116	551,948	-	하나은행	현금 or 계좌
울산	2,612,250	1,483,500	967,500	161,250	-	농협중앙회, 경남은행	현금 or 계좌
경기	757,000			757,000	29개 시군 (수원제외)	수원-기업 연천-농협	
강원	671,130		447,420	223,710	19개 시군 상:기=55	농협중앙회	현금 or 계좌
충북	1,520,000	202,600	293,300	1,024,100	-	농협중앙회	농협계좌
충남	899,897			899,897	천안, 아산, 계룡, 금산, 부여, 당진, 홍성(7개시군)	농협중앙회	현금 or 계좌
전북	2,351,043	224,995	1,417,365	708,683	-	농협중앙회	현금 or 계좌
전남	2,770,500	1,000,000	834,800	935,700	-	농협중앙회	계좌
경북	4,346,398	1,827,576	1,407,191	1,111,441	-	농협중앙회	현금 or 계좌
경남	3,868,888	1,283,576	1,025,625	1,559,687	양산, 거제 (2개 시군)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현금 or 계좌
제주	400,000		30,000 (삼천원권)	370,000	-	제주은행	계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사랑상품권” 이용

※ 전체 3,840여억 원 중 상품권(2,729억원), 기프트카드(1,111억원) 지급

- 대구광역시에서는 희망나눔 상품권을 추가 발행(35억)하여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였으며, 충북 음성군에서는 공무원들의 상품권 사주기 운동이 처음 시행되었음

-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참여인원대비 100% 이상의 상품권 가맹점을 확보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2008년 8월 14일 현재, 전국적으로 지폐형 상품권 가맹점은 32만 개소, Gift 카드형 가맹점은 85만 개소를 확보하였음

○ 고용증대 및 지역영세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

- 2009년 6월 취업자 수는 5월 22만여 명 감소에서 증가세(4천명)로 돌아섰음

- 특히 희망근로 상품권은 당초 가맹점부족, 현금화불편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시행 첫 달에 77%의 회수율을 보이면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출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영세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2009년 7월, 전통시장 경기동향지수는 희망근로 상품권이 대량 유통된 결과 등으로 인해 연중최고치(65.6)를 기록하였음 (2009년 8월 17일,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 센터 발표)

3. 장기적 경제적 성과

○ 친환경 중심의 사업 구성

- 4대 랜드마크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사업, 동네마당사업,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백두대간 보호사업 및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은 대표적인 친환경 중심 사업임

-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한반도의 생태축을 복원·보호하는 사업으로서 행안부, 산림청,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개도 32개 시군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음

- 자전거 인프라 개선사업은 녹색성장 대표사업으로 이번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자전거 도로 설치와 보관대 설치 및 수리, 자전거 도로 시범네트워크 조성, 이용실태 DB 구축 등의 세부사업 단위로 추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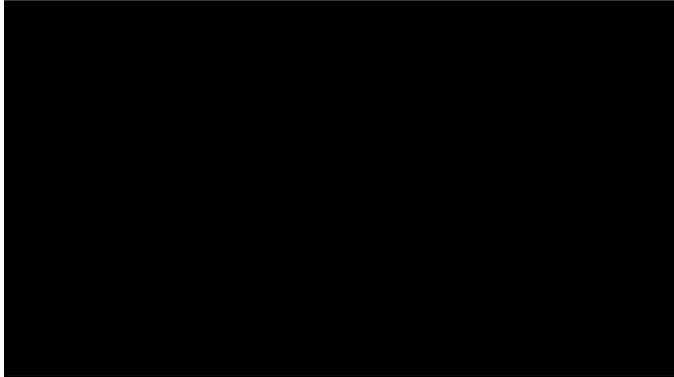
<표-37> 사업별 희망근로 사업의 사업장, 투입 인원, 투입 예산

구분	계	A	B	C	D	E	F	G	H
		기업 지원	재해 예방	주민생활 환경개선	서비스 지원	정보화 자료 조사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 정화	지역공공 시설보수
사업장 (개소)	28,903	208	2,551	3,219	8,327	2,890	3,356	4,702	3,650
		0.7%	8.8%	11.1%	28.8%	10.0%	11.6%	16.3%	12.6%
인원 (명)	255,237	2,533	23,118	48,763	44,157	9,917	50,278	56,513	19,972
		1.0%	9.1%	19.1%	17.3%	3.9%	19.7%	22.1%	7.8%
예산 (백만원)	1,706,500	34,980	149,044	328,028	284,936	64,981	338,973	363,436	128,459
		2.0%	8.7%	19.2%	16.7%	3.8%	19.9%	21.3%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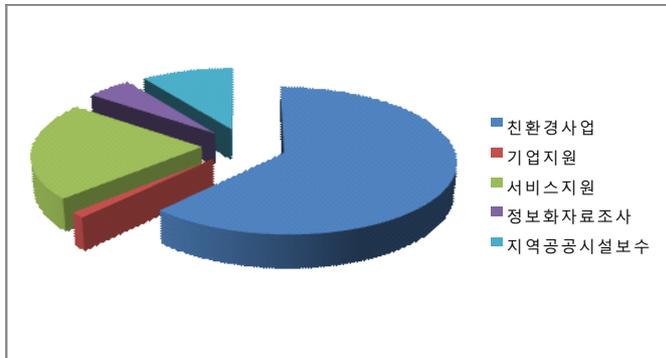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자료, (2009년 7월 현재.)

- 8개 사업 중에서 재해예방, 주민생활 환경개선,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정화의 4개 영역이 친환경 중심의 사업에 해당
- 전체 사업의 48%, 투입 인원의 70%, 투입 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어, 희망근로사업의 주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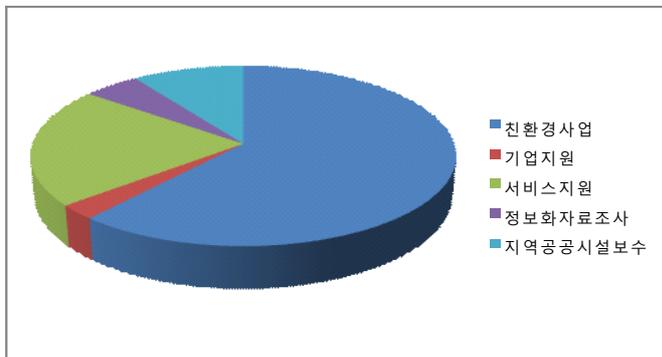
<그림-23> 희망근로 해당 사업별 사업장 개수 비율



<그림-24> 희망근로 해당 사업별 투입 인원수 비율



<그림-25> 희망근로 해당 사업별 투입 예산 비율



- 최근 환경 관련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세계 주요국의 추세에 맞는 바람직한 방향을 채택하고 있다고 판단됨
- 친환경 사업은 투입에 비해 받을 수 있는 편익 및 정(+)의 외부효과가 큰 사업으로 잠재적인 경제적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편익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 선정

- 서울의 내외사산 등산로를 연결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는 Green Trekking Circle을 비롯하여 경북도의 종가 고택정비 탐방 자원화사업, 부산과 대전의 Green Way 조성 등은 희망근로 사업인 동시에 환경개선을 통한 관광자원의 개발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임
- 굴뚝 없는 성장을 가능케 하는 관광사업의 특성상 본 희망근로사업은 편익이 항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되고 있음

○ 시설공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대비 비중 상승

- 희망근로와 유사한 정책이었던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인건비의 구성(90%)이 과다하여 단순 노무 작업 위주의 구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바 있음
- 즉 1단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비, 필수장비 구입 등 부대 경비는 원칙적으로 시 군비에 별도로 확보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할만큼 인건비 이외의 사업비 지출은 제한하여 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킨 바 있음
- 인건비 비중을 높인 경우 시행 가능한 작업은 단순 노무 작업일 뿐이고, 그 경우 극히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뿐, 중·장기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기간사업 혹은 SOC 사업과는 거리가 큼
- 희망근로 사업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부대비 비중을 상승시킴(25%→40%)으로써 시설공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배려하고 있음
-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판단에는 무리가 있으나, 4대 랜드마크 사업 중 공장진입로의 확장 및 포장 사업은 향후 국가 물류비용의 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됨

○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사업 선정

- 4대 랜드마크 사업 중 자전거 인프라 개선 사업은 대기 오염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확보해 줄 기간 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이며, 동네마당 조성 사업은 주거 환경 취약 지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사업임

<표-38> 희망근로 4대 랜드마크 사업개요

4대 랜드마크	백두대간 보호사업	○ 6개 도, 32개 시·군
	동네마당 조성	○ 주거 환경 취약지역(63개 시군구) : 88개소
	공장진입로 확·포장	○ 26개 시군구 28개 사업
	자전거 인프라 개선	○ 자전거 보관소, 이용통계, 시범사업 등

○ 지역별 다양성의 반영

- 시군구 특화사업은 재해예방, 환경정화, 지역공공시설 개선, 정보화 및 자료조사 중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며, 읍면동 사업의 경우 주로 주민 밀착형 생활개선 사업이 대다수임
- 희망근로 사업은 사업 시행 전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생산적 사업의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가 높은 평가를 받고,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지역별 다양성을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음

<표-39> 희망근로 시도 대표사업개요

지역	주요사업	개요
서울시	Green Trekking Circle	내외사산 숲길잇기
부산시	Green Way 조성	해안길, 강변길, 숲길조성 사업
대구시	마라톤 코스주변 건물옥상 정비사업	마라톤구간 코스 건물옥상 정비
인천시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옥외광고물 정비
광주시	저소득층 자녀 외국어 교실운영	저소득 자녀대상 외국어 무료교육
대전시	Green Way 조성	환경 친화적인 잔디블럭시공
울산시	태화강 생태공원 및 초화단지 관리	태화강 공원, 둔치 초화단지 관리
경기도	희망일터 정비사업	공장주변 화단조성, 불법광고물 제거
강원도	등산로 가꾸기 사업	등산로 가꾸기
충북도	무심천 생태복원 및 자전거도로 공원화 사업	무심천 생태복원 및 자전거도로 정비
충남도	지하수 폐지하관정 복구	지하수질 보전을 위한 폐지하관정 복구
전북도	아름답고 건강한 생태하천 정비	전주천, 삼천 등 하천 환경정비
전남도	옥외·공공 광고물 일제정비	옥외광고물 등 시설 정비
경북도	종가·고택정비 탐방자원화 사업	한옥집단마을 고택보수 및 환경정비
경남도	꽃길 가꾸기 사업	꽃길·꽃단지 및 산책로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전공 Career 개발사업	도내 대학생 사회봉사활동 지원

시
·
도
대
표
사
업

- 희망근로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띠었던,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참가자들의 적성이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대부분 노무직에 배정되어 풀 뽑기 같은 단순작업을 하게 되거나 당초 배정한 일 외에는 어떠한 일도 배정하지 않는 등의 경직된 운영패턴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음
- 이는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 내는 데 무리가 따르기 때문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다양한 일거리를 찾아내는 데는 자기 지방의 특색 및 수요를 잘 알고 있는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 바람직함

-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지방 정부 주도 사업 및 지역 밀착 사업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거리의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일거리의 발굴을 통해 근로자 적성 및 흥미에 맞는 작업을 통해 희망근로 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음
- 지역 밀착형 사업을 통해 애항심을 고취하고, 작업의 결과물을 자신들이 직접 이용하고 조망할 수 있음을 통해 작업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게 함
- 장기적으로는 지역 숙원 사업의 해결 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개선방안

○ 민간 일자리의 대체효과

- 많은 문헌에서 불황기 공공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체효과(crowding out effect)를 유발하여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고 있음
- 즉, 공공근로는 순수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단순히 대체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만 일으키고 있음 (Calmfors 1994: Calmfors and Lang 1995: Grubb and Martin 2001)
- 참가자들이 민간부문의 취업을 회피하고 공공근로에 의존하는 잠금(lock-in) 현상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실업(persistent unemployment hypothesis)에 빠질 우려가 있음
- 실제 6월 23일자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군 단위 지역에서는 힘든 '식당일'보다 '희망근로제' 등 손쉬운 일자리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종업원을 구하지 못하는 인력난까지 겪고 있으며, 불황에 인력난까지 겹쳐 식당의 휴·폐업 사태가 속출

- 본 문제점의 대안은 희망근로 사업의 다양화 및 작업의 난이도에 따른 차별적인 임금지급이라 판단
- 첫째,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일을 희망근로란 이름으로 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면, 합리적인 개인은 당연히 민간직업보다는 희망근로를 택할 것임
- 따라서 희망근로 사업의 다양화는 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안임
- 둘째, 작업의 난이도에 관련 없이 동일한 임금(일비 33,000원)을 지급한다면, 누구나 보다 쉬운 일자리로 가기를 원할 것이며, 그 일이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면서도 보수가 많다면, 대체효과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과 유사한 작업에는 유사한 임금을 지급하고,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보다 쉬운 일에는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여 차별화함으로써, 희망근로사업은 무조건 “쉽고 많은 보수를 받는 일”이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없앨 필요가 있음

○ 공공근로사업과의 유사성

- 4월 15일자 CBS 기사에 따르면, 매달 50만원 대의 잡초 뽑기 등 기존의 공공근로와 월급(83만원)의 절반은 현금, 절반은 소비쿠폰으로 주며 학교 담 허물기 등에 투입하는 희망근로제 사이에 얼마나 질적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이는 지난 IMF 경제위기 시기의 공공근로사업이 취로사업과 유사하며, 차이는 없이 임금만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비판과 흡사한 면이 있음
- 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빈번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개선하며, 임금이 올라간 만큼의 작업 난이도 조정을 통해 공공근로사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지방 재정의 위기

- 글로벌 경기침체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재정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음. 내년에도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기 위기극복을 위해 예산을 앞당겨 쓰고 모자란 부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은 빚쟁이 신세로 전락했음
- 감세에 따른 세금감면 규모가 늘어나는데다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드는 데 대한 목적예비비 편성 지원이 없기 때문임. 결국 각 지자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년보다 앞당겨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상태임
- 9월 21일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3.9%에 그침. 서울(85.7%)과 경기도(66.1%)는 나은 수준이지만 강원도(23.3%), 전남도(11.0%), 경북도(20.7%) 등은 열악함
-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의 지방비 지출을 가져오는 희망근로 사업과 같은 단기성 사업은 지방 재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됨
- 본 문제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를 늘리는 대안 밖에 없음. 다만, 현재 잘 진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단순한 국고보조의 확대보다는 빈번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의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통해 효율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결되지 않는 선심성 사업

- 8월 14일자 서울연합뉴스에 따르면, 희망근로 사업이 제한적으로 예산과 대상 인원을 대폭 축소해 내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 이미 경기도는 최근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평택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희망근로 사업기간을 평택지역에 한해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상태임

- 연장 방식은 일단 11월 말로 25만 명을 고용하는 기존 희망근로를 종료하고 평택처럼 특정 고용 불안 지역이나 저소득·취약계층을 다시 선별한 뒤 규모를 크게 줄여 운영하고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점진적으로 끝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 문제는 지난 IMF 경제위기 시기의 공공근로사업이 한시적 사업이라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계속 사업으로 바뀌었으며, 심지어 선심성 사업으로까지 변질되어온 과정과 유사하다는 데서 경계할 필요가 있음
- 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예를 들어 실업률 3.2%)을 달성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일몰법과 같은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정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